

공간복지기본법 제정 방향 연구

A Study on Enactment of Framework Act on Space Welfare

오성훈 Oh, Sunghoon
유광흠 Yu, Kwangheum
성은영 Seong, Eunyoung
강현미 Kang, Hyunmi
한수경 Han, Sukyung

(a u r i

연구진

오성훈 선임연구위원
유광흠 선임연구위원
성은영 부연구위원
강현미 부연구위원
한수경 부연구위원

자문위원

도시계획

- 김승남 중앙대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
- 김충호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지역 및 도시재생

- 임상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박소영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건축계획

- 윤서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복지시설

- 변나향 충북대 건축학과 교수
- 유다은 이화여대 미래사회공학부 교수

데이터 및 플랫폼 관련

- 김현중 (주)세아 이사
- 임현성 올림 대표이사

주요 내용

공간복지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법제 체계 마련 필요

- 집주변에서 일상활동을 할 수 있는 양질의 공간환경에 대한 시대적 변화 요구
- 국민 대부분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등 생활 전반에 대한 풍요로운 일상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생활기본권으로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공간과 서비스를 “공간복지”로서 법적인 보장 필요
- 국민 눈높이와 지역 특성에 맞는 공간복지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도의 공간복지시설 및 서비스를 계획적으로 공급 및 관리할 새로운 체계를 마련할 필요

공간복지 법제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도출하고 관련 법제 및 사례 분석

- 사회 여건변화에 따른 미래수요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수요자 중심의 계획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지역특성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의 공간복지 서비스 실현할 수 있도록 지역 주도의 계획·사업 추진 기반 마련 필요
- 기존 법제 내 개별구역 단위, 일부 시설에 한정하여 수립되던 공간복지시설 및 서비스 관련 계획을 지역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공간복지 서비스계획으로 통합 수립, 관리,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화
- 미국의 커뮤니티 서비스 기본계획, 캐나다의 공원·여가시설 기본계획, 일본의 입지 적정화계획 등은 수요자 중심, 지역 면밀한 실태조사 기반의 융통성 있는 공간복지 서비스 계획으로 참조 가능

공간복지기본법(안) 제시

- 공간과 복지 분야에 대한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체계를 정하는 법률로서 공간복지에 관한 법률은 기본법 체계로 추진
- 중앙은 공간복지 기본계획으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지역은 여건에 맞게 자체 계획으로서 공간복지 시행계획, 공간복지 서비스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체계 마련
- 정책 지원 체계로서 연구사업, 정보시스템 구축, 성과평가 등을, 협력체계로서 공간복지정책지원센터의 지정, 국가공간복지정책위원회의 설치 등을 제도화

차 례 CONTENTS

<u>I</u>	법제화 필요성 및 공간복지 개념 정립	01
	1. 추진배경 및 법제화 필요성	01
	2. 공간복지의 개념 정립	05
<u>II</u>	공간복지 법제화를 위한 주요 이슈와 과제	14
	1. 사회 여건변화에 따른 ‘미래수요’에 유연한 대응	14
	2.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의 공간복지 서비스 실현	17
	3. ‘지역 주도’, 중앙 지원의 계획·사업 추진 기반 마련	21
<u>III</u>	(가칭)공간복지기본법 제정을 위한 관련 분야 법제 및 사례 분석	24
	1. 관련 법제 검토	24
	2. 법정 시설계획 검토	36
	3. 커뮤니티 시설 계획 사례	55
<u>IV</u>	(가칭)공간복지기본법 제정(안)	76
	참고문헌	103

표차례 LIST OF TABLES

[표 1] 복지관련 법률의 복지 정의와 공간 및 시설 관련 조항	6
[표 2] 공간복지시설 관련 법 및 종류	25
[표 3] 도시계획시설 종류 및 관련법	27
[표 4] 공간권역에 따른 기초생활인프라 시설의 구분 및 개별 근거법	29
[표 5] 복지 관련 법 및 소관부처	31
[표 6] 시설과 공간관련 법 및 소관부처	32
[표 7] 공간 및 복지 관련 기본법	33
[표 8] 도시·군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수립기준과 공간복지시설 연관성	40
[표 9] 도시·군관리계획 내용과 공간복지시설 연관성	46
[표 10]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과 공간복지시설 연관성	52
[표 1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내용과 공간복지시설 연관성	54
[표 12] Primary and Support Asset Rating Scale	59
[표 13] 권장사항 및 우선순위 실행계획	63
[표 14] 추천시설 요약 (20년 실행계획)	65
[표 15] Facilities Master Plan Reporting Scorecard	69
[표 16] 입지적정화 계획의 주요 개념	72
[표 17] 시스이정 도시기능유도시설 설정 예시	75

그림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1] 생활SOC 3개년 계획의 목표 및 전략	8
[그림 2] 지역사회 기반 공간복지 대상 및 범위	12
[그림 3] 연령별·성별 인구구조의 변화(1965~2050)	14
[그림 4] 세대 원수 비중변화(2016~2020)	15
[그림 5] 생활환경에서 공간복지에 대한 인식	16
[그림 6] 공간복지시설의 양적 충족만으로는 다양한 수요 변화에 대응 어려움	17
[그림 7] 생활체육시설의 지역간, 지역내 접근성 차이	18
[그림 8] 도시성장단계에 따른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 공급 변화	19
[그림 9]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재정자립도	21
[그림 10] 각 법률 상 공간복지시설의 포함 관계	25
[그림 11] 퍼리아시의 시설 수준분석도	61
[그림 12] 토론토시의 커뮤니티센터 공급 전략	66
[그림 13] 토론토시의 커뮤니티센터 재배치 및 활성화 전략	67
[그림 14] 입지적정화계획(compact+network) 개념도	71
[그림 15] 입지적정화계획 제도 이미지	71
[그림 16] 거주유도구역의 개념	72
[그림 17] 도시기능유도구역의 개념	72
[그림 18] 특정용도유도지구 지정에 따른 용적률 완화	74
[그림 19] 입지적정화계획 작성 흐름	75

I 법제화 필요성 및 공간복지 개념 정립

1. 추진 배경 및 법제화 필요성

■ 집주변에서 일상활동을 할 수 있는 양질의 공간환경에 대한 시대적 변화 요구

-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개인의 행복한 삶의 가치가 중요해지면서 일상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얻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양질의 공간환경 필요
 - 행복은 만족과 기쁨의 감정이며, 삶의 가치, 관계, 주거와 환경의 질, 일 등의 영역에서 그 수준을 측정 가능(정해식 외, 2019)
 - 일상은 일, 학습, 사회적 교제, 운동 등의 활동(생활시간조사, 통계청, 2016)으로 이루어지며 일상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는 직장, 학교, 도서관,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이 해당(성은영 외, 2019)
- 특히, COVID-19 유행 및 장기화 등으로 인해 이동과 접촉 최소화가 요구되면서 의료, 체육, 문화 등의 일상 및 여가활동도 집주변에서 충족하게 되어 근린의 편의 및 복지시설 공급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

■ 생활기본권으로서 “공간복지” 보장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 요구

- 새로운 위험으로 변화된 뉴노멀시대에는 정든 곳에서 계속 거주하고(Ageing in Place), 누구나 불편이 없는(Normalization) 공간환경의 보장 추구

- COVID-19 등 질병, 재난,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 등 신사회적 위험(New Risks, New Welfare, Taylor-Gooby, 2004)은 개인의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 그러나 개인이 향유할 수 있는 일상의 편의와 복지를 위한 시설과 서비스의 공급 수준은 사는 곳, 계층에 따라 큰 격차, 공간적 배제 문제 발생
 - 교육, 의료, 문화, 복지 등 시설이 시장논리에 따라 수익성이 확보되는 인구 밀집지역에 입지하여 수도권과 지방, 주거지 여건* 등에 따라 격차
- * 노후저층주거지로부터 기초 생활인프라까지의 평균거리는 약2.7km이며(성은영 외, 2013), 아파트와의 만족도 격차는 10년 동안 12%p→ 14%p로 확대(2010~2016 주거실태조사 결과)
- 인간은 누구나 도시 공간을 이용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Lefebvre, 1968) 공간이용의 수혜는 모두가 누려야 하므로(Harvey, 1973) 공간적 배제(spatial exclusion)는 사회 정의(social justice)에 반하는 것임
- 따라서 국민 대부분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등 생활 전반에 대한 풍요로운 일상 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생활기본권****으로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공간과 서비스**를 “공간복지”로 보장할 필요

* 2019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결과(‘20.6), 국민들은 건강 등(68.9%) 서비스 분야 및 서비스 대상(육구가 있거나 필요한 사람 모두에게 정책 지원, 43%)의 확대를 희망 (보건복지부, 2020)

** 세계인권선언(UN, 1948)에서는 제25조를 통해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11조, 34조 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 가치와 생활 영역에서의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

■ 공간복지 관련 서비스 정책 및 사업의 추진 한계 극복 필요

- 공간을 매개로 한 복지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각 소관부처 및 지방 정부의 다양한 복지시설 사업도 확대 추세
 - ‘22년까지 총 30조원 투자, 체육관, 도서관 등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생활SOC 3개년계획 및 생활SOC복합화사업을 본격 추진

- 각 지역에서도 정부의 각종 지역단위개발사업* 및 시설별 국비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복지시설 공급을 적극 확대

* 도시재생뉴딜사업 :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어울림플랫폼 추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기초생활거점, 기초생활기반 확충/ 어촌뉴딜300사업 : 어항시설정비 등

** 공공도서관 건립, 국민체육센터 조성 지원(문화체육관광부),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다함께돌봄센터 제공(보건복지부), 가족센터 건립 지원(여성가족부) 등

- 국가균형발전 및 복지서비스 소외지역에 대한 우선적 시설확충이 추진되어 인구 저밀, 축소도시에 과잉 공급, 시설 운영비 부담 우려

“너도나도 생활SOC 사업 유치에 나선 지자체...면밀한 사업성 검토부터...정부 생활SOC 예산 욕심에 유치 나섰다가 의회 등에 제동”, (대한지방자치뉴스, 2019.3.29.)

- 또한, 소관 부처, 사업별로 공급, 지자체가 유지·관리하는 과정에서 시설 기능의 중복성, 예산투입의 비효율성 등 검토·조정도 필요
 - “생활SOC3개년계획(‘20~’22)”의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범정부 추진 체계로서 “생활SOC추진단”을 한시적으로 설치
 - 생활SOC복합화사업에 대한 규정 역시 「도시재생법」,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학교복합시설법」 등 개별법으로 분리되어 제도적인 틀이 미흡한 상태(류영국, 2020:14)

■ 미래 및 지역의 여건변화에 대응가능한 공간복지 추진체계 요구

- (변화에 유연한 대응) 저출산·고령화, COVID-19, 기후변화 등 사회변화에 따라 노인층, 비대면, 실내공간 등 시설의 양과 질, 형태 등도 대응이 필요
- (지역 여건에 맞는 서비스) 저성장, 인구감소시대에 공간기반 복지서비스 역시 다양한 지역의 여건에 따라 지속가능한 공급 및 관리 필요
 - 인구 밀집지역은 서비스 접근성 양호하나 기존 시설의 용량 부족하고, 인구 감소지역

은 유희시설이 증가하고 서비스 수요인구는 부족한 상황

- 수요 변화, 유지관리·운영비 증대, 시설 노후화에 따라 신규 시설의 공급 혹은 기존 시설의 재배치 등 부담가능한 정책 추진이 바람직

협동조합의 '큰 손' 농협, 농촌 돌봄서비스의 '큰 손'으로 나서길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여주는 사회적 경제이지만, 사회적 경제 조직 비중은 6%로 아직 미미해 정부의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로 농협의 농촌형 돌봄 활성화 정책 기대 의료복지사협 설립의 자금 문턱을 낮추기 위한 제도 변화중

출처: 한겨레 신문(21.1.5),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77326.html

- (지역 주도, 중앙 지원의 계획·사업추진) 서비스 주체인 지자체가 자립적으로 서비스 공급 및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시점

■ 공간복지 관련 새로운 법제 체계 마련 필요

- 새로운 시대적 여건 변화와 국민의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공간복지 계획 및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제를 통해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 기존 개별법 및 사업으로 추진하던 복지 관련 시설이나 서비스가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고 지역과 대상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지역 자체의 공간복지계획을 수립·추진
- 동시에 범부처 사업으로 추진가능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기본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음

2. 공간복지의 개념 정립

■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으로서 복지

- 복지(福祉)는 사전상 “**행복한 삶**”¹⁾을 의미하며,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²⁾로서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로 인식됨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4.

사회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 또한 복지는 대한민국 헌법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전 국민이 국가로부터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에 국가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공간 및 시설 등은 복지 실현의 주요한 수단

- 복지를 실천하는데 있어 공간(空間, space)은 필수불가결한 개념(최명민 외, 2017:100)

1)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출처: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2020.12.8. 검색)
 2) 고려대한국어대사전 (출처: <https://ko.dict.naver.com/>, 2020.12.8. 검색)

- 복지실천의 목적이 ‘인간의 구체적인 삶’에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때, 구체적 삶은 특정 ‘시간’과 ‘공간’에 배태된 경험
- 복지 관련 법과 정책에서 공간 및 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중요한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복지를 정의하는데 지원 수단으로서 공간을 포함하고 시설의 설치, 관리 등도 규정

[표 1] 복지관련 법률의 복지 정의와 공간 및 시설 관련 조항

법률명	복지 정의 관련 조항	공간 및 시설 관련 조항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제34조 (노인의료복지시설) 제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 제38조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조(정의)3. “장애아동 복지지원”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따라 의료비지원, 보육지원, 가족지원 및 장애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지원 등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2조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장애인복지법	제3조(기본이념)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	제57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등)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제59조 (장애인복지시설설치) 제59조의13 (피해장애인쉼터) 제60조 (장애인복지시설운영의 개시 등) 제60조의2 (장애인거주시설이용절차) 제60조의3 (장애인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제60조의4 (장애인거주시설운영자의 의무) 제62조 (시설의개선,사업의정지,폐쇄 등)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2조(정의)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제31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제32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제32조의2 (기출청소년의 청소년 쉼터 계속

법률명	복지 정의 관련 조항	공간 및 시설 관련 조항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4호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이용) 제34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제35조 (시설개선,사업정지,폐쇄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2. “지역사회복지”란주민의 복지증진과삶의질향상을위하여지역사회차원에서전개하는사회복지를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34조의2 (시설의 통합설치·운영 등에 관한 특례) 제34조의4 (시설의 안전점검 등) 제34조의5 (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제38조 (시설의 휴지·재개·폐지신고 등) 제40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시설의 폐쇄 등)
근로복지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 (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제29조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제31조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이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농어촌에 보건 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사회복지시설의 우선 지원) 제24조(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출처 : 저자 작성, 자료 : 각 법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검색일: 2020.12.16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 및 공간을 매개로한 복지 서비스 확대

- 저소득층,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기존 사회복지서비스는 주로 선별적 복지에 치중
 - 복지는 복지정책이 적용되는 시민의 범위와 급여 및 서비스 배분방식에 따라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로 나눌 수 있음(유근춘 외, 2011:20)³⁾

- 경제적 수준 향상과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수요에 부응하여 최근 정부는 **보편적 복지**⁴⁾의 확대와 복지 사각지대 축소를 지향⁵⁾하는 정책에 집중하면서 생활SOC 3개년 계획 등 공간과 시설 측면에서도 국민과 삶의 공간에 대한 공간복지 전략 마련
 - 사회복지서비스 측면에서도 국민의 삶의 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의 역할은 결국 국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방향성을 제시
 - 특히 기본권 차원에서의 복지와 이에 맞는 시설과 공간 확충 수요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여가, 보건, 교육 등의 시설 및 급여 등의 지원을 통해 보편적, 포용적 복지 서비스 확대 추세



[그림 1] 생활SOC 3개년 계획의 목표 및 전략

출처 : 국무조정실 생활SOC 추진단(2019.4.1.), 생활SOC 대국민 공청회 자료집.p.12.

3) 전체인구를 포괄하느냐 혹은 특정 집단에 제한되느냐, 급여 및 서비스가 보편적 배분(universal allocation)되느냐 혹은 어떤 형태의 필요검사(needs-testing)에 따라 선별적 배분(discretionary allocation)되느냐로 구분

4) 보편적 복지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혹은 급여나 서비스를 국민의 일부에 국한하더라도 그 국한하는 기준이 경제적 기준(자산 등)에 의한 것이 아닌 복지(Rothstein, 1998:20)

5) 포용적 복지의 중간성적표, 이봉주, 2019.5.17., 복지칼럼.

<https://www.bokjiro.go.kr/nwel/welfareinfo/livewelnews/news/retireveExpertDetail.do?srchListType=305&searchWrd=&srchKeyCode=&pageUnit=10&pageIndex=1&dataSid=6660880#none>, 검색일 : 2020.12.15.

■ 공간복지에 대한 논의

- (공간을 기반으로 사회정의 실현) 인간은 누구나 도시 공간을 이용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Lefebvre, 1968) 공간이용의 수혜는 모두가 누려야 하는 것이 사회정의(Harvey, 1973)
 - 모두의 일상적 복지공간에서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적 권리로서의 공간사용권을 가져야 하며, 누구에게나 골고루 공간사용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고, 이 공간 내에서는 모두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장소가 되어야 함(김영화, 2010:117)
 - 공간기반 사회복지실천은 공간을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이자 매개이고 과정이자 결과로 활용한 실천방법이며 체제에 의해 만들어지는 지역으로부터 주체가 만들어 가는 지역을 가능하게 하는 실천방법임(최명민 외, 2017:121)
- (복지 관련 생활공간 조성에 대한 국가의 역할)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기본법」 등 공간계획 관련 법을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행복한 삶(복지)을 위한 공간의 계획 및 이용 목표를 정하고 있음
 - 「국토기본법」 제4조의 2에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모두가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국토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명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에는 도시의 지속성, 국토의 균형발전 주민의 쾌적한 삶을 위하여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를 명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교육시설, 문화·체육시설, 교통시설 등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 「건축기본법」 제7조~9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안전, 건강 및 복지에 관련된 생활공간을 조성해야 함을 생활공간적 공공성, 사회적 공공성, 문화적 공공성으로 명시

건축기본법

제7조(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 구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고 그 안전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용자의 건강과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이용을 배려하여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확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다원적(多元的) 문화에 부응하고 미래사회의 문화적 요구변화와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축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이 미래세대에 계승되는 사회·경제적 자산으로서 조성되고, 그 가치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하고 사용하는 과정 등에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재이용과 재생을 촉진함으로써 자연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건축의 문화적 공공성 실현) 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하여 사용하는 전 과정에서 건축의 문화적 가치가 향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문화적·산업적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창의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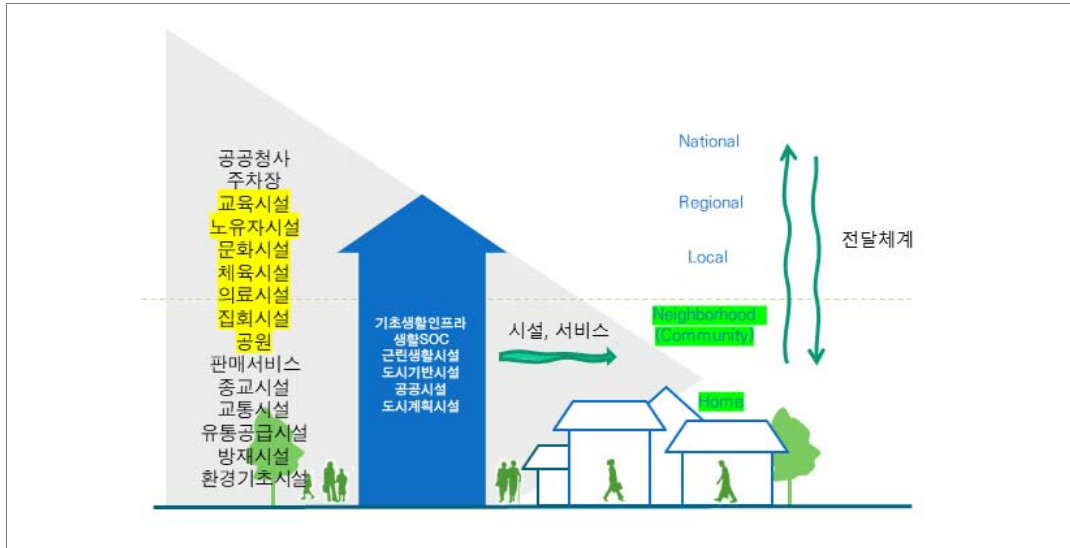
-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의 중요성)** 공간 및 시설이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증가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가능한 비용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생활환경에서 공간복지를 구현하는 것이 필요**
 - **생활밀착형 공간복지**는 생활권단위에서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이 물리적 장소중심으로 통합연계되는 것을 의미 (국가 건축정책위원회, 2015:4)
 - **사회서비스의 효과**는 접근성(accessability), 지불가능성(affordability), 그리고 서비스 질(quality of service)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 실현(Fuchs, 1996; 박세경, 2014에서 재인용)

■ 공간복지의 정의 및 개념 정립

- 상기 배경과 논의를 종합하면 공간복지를 정의하는데 중요한 키워드는 “생활·일상공간”, “누구나, 모든 세대와 계층”, “편의”, “행복” 등에 해당
 - 생활 속의 공간복지는 단순한 시설복지를 넘어서서 거주자 특성, 거주공간환경을 고려하여 공간을 통해 복지의 인프라를 제공하거나 조성하여 생활 속에서 복지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개념(이영범, 2020:30)
 - 주거중심의 선별적 복지를 넘어 지역을 아우르는 보편적 장소중심의 복지로서의 개념(김혜정, 2020:26)
 - 모든 세대와 계층에서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를 지역에 맞춰, 좋은 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서울주택공사, 2019:17)
 - 공간복지의 목적은 사람들이 생활공간에서 제공된 생활SOC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문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주요한 생활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임명진 외, 2020:29)
- (공간복지)는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세대와 계층에게 필요한 공간과 서비스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

■ 공간복지 대상 및 범위 검토

- 공간복지의 정의에 따라 공간복지의 대상은 모든 세대와 계층의 국민에 해당하며 복지의 전달체계는 복지자원에 대한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교류를 의미하므로 시설을 포함한 공간을 매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서비스를 모두 포괄
 - 복지의 전달체계는 국가와 시민사회에 의하여 동원된 복지자원을 어떤 방식을 통하여 복지서비스 수급대상에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집행체계
 - 사회복지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조직화된 체계, 또는 공급자들 간의 조직적인 연계를 의미(김기현 외, 2013; Gilbert and Specht, 1986; 함영진, 2010; 박근석외 2016:104 재인용)



[그림 2] 지역사회 기반 공간복지 대상 및 범위

출처 : 저자작성

- (지역사회 기반)은 개인(집) 주변의 일정 영역으로서 장소(place)를 의미
 - 시설과 공간이 입지한 지역이자 공급 및 관리, 이용 주체 역시 지역내 공공과 민간, 지역민이 되어야 함을 전제
 - 일반적으로는 복지전달체계의 공급자를 고려하여 행정구역단위로서 읍·면·동, 시·군·구, 시·도를 고려할 수 있으나, 공간복지 구현을 위한 주체별 역할에 따라 지역사회는 달라질 수 있음
- (지역내 공간복지 실현을 위한 가능한 매개의 범위)는 집(주거), 기반시설과 생활편의 시설(기초생활인프라, 생활SOC 등)에 해당되나, 공간의 사적, 공적 특성을 고려하고 사회간접자본으로서 생산기반시설(도로, 철도, 공항 등)을 제외한 생활에 편의와 복지를 주는 시설로서 한정할 수 있음
 - 개인의 주거에 대한 복지는 「주거기본법」을 통해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고 기반시설은 복지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므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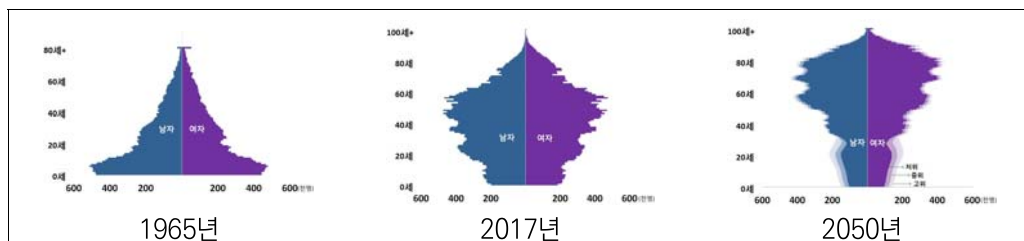
- (공간복지서비스) 공간을 기반으로 한 복지이므로 시설은 물론 해당 시설에서 혹은 시설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모두 포괄
 - 주거복지 및 사회복지 서비스는 해당 복지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인데 비해 공간복지서비스는 공공 및 민간에서 해당 지역사회에서 유무상으로 제공하는 점에서 차이
 - 사회서비스의 전달체계는 어떤 대상(누구)에게 어떠한 급여(provision)와 서비스를 어떻게 배분(allocation)하고 어떻게 전달(delivery)할 것인가에 따라 정해짐(유근춘 외, 2011)
 - 사회서비스는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위험에 대하여 개인이나 가족의 역량으로 대응할 수 없는 사회적 집단(취약계층 포함)의 사회적 욕구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자 예방적인 공공서비스(김은정 외, 2008; 윤영진 외, 2011:161재인용)
- (공간복지시설)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과 공간복지를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과 공간
 - (생활SOC)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로서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로 범위 한정, 총리훈령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 (기초생활인프라) “도시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생활인프라) “거주민이 주거, 근로, 교육, 휴식, 육아, 이동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반시설”, 국토교통부 훈령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제2조

II 공간복지 법제화를 위한 주요 이슈와 과제

1. 사회 여건변화에 따른 ‘미래수요’에 유연한 대응

■ 인구·가구구조, 기후 변화, 감염병 등 사회변화에 따른 공간복지 수요의 다변화

- 저출산·고령화 추세 심화에 따라 인구감소⁶⁾가 시작되어 양적 확충도 중요하지만 성, 연령 등 이용 대상과 지역에 맞는 공간복지 시설의 공급 변화 필요
 - 단순히 인구증가율의 둔화가 아닌 실제 인구절벽이 시작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유희시설의 발생과 서비스의 재배분 논의 본격화 필요
 -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의 정기적 사회활동 비율 증대에 따라 다양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수요도 증가 전망



[그림 3] 연령별·성별 인구구조의 변화(1965~2050)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7~2067년) 보도자료, p.18.

6) 2020년 12월 31일(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주민등록 인구감소 ▲1인 세대의 급격한 증가 ▲60대 이상 인구 비중 증가 ▲출생(등록)자 수 역대 최저 ▲경기·세종·제주·강원·충북을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의 인구 감소 (‘사상 첫 인구감소, 세대수는 사상 최대’, 행안부 보도자료, 21.1.4)

- 1인가구는 2020년 전체 가구의 약 39.2%로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있어 수요를 반영하고 공간복지 서비스를 다각화할 필요
 - 20~30대 청년층 및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율과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비율이 높은(이재수 외, 2012) 1인가구는 주거면적을 최소화할 수 밖에 없으므로,
 - 서재, 사랑방 등 주거의 다양한 기능을 공공공간을 통해 충족해야 하는(맹다미 외, 2018:4) 등의 새로운 수요 발생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이상
2020년	39.2%	23.4	17.4	20.0
2019년	37.8%	22.8	17.8	21.6
2018년	36.7%	22.4	18.1	22.9
2017년	35.7%	21.9	18.3	24.1
2016년	35.0%	21.5	18.4	25.1

[그림 4] 세대 원수 비중변화(2016~2020)

출처 : 행안부, 2021.1.4. 보도자료, p.7.

- COVID-19 확산, 미세먼지 심화, 폭염, 폭설 등 감염병과 기후변화 등에 따라 실외활동의 제약과 환기, 채광 등에 설비에 대한 변화 요구가 증대되면서 전천후 이용가능한 체육시설 조성⁷⁾, 시설 운영의 원칙 및 기준 마련 등 구체적인 대안 마련 필요

기둥 없는 '에어돔'... 국내 최초 학교 실내체육관 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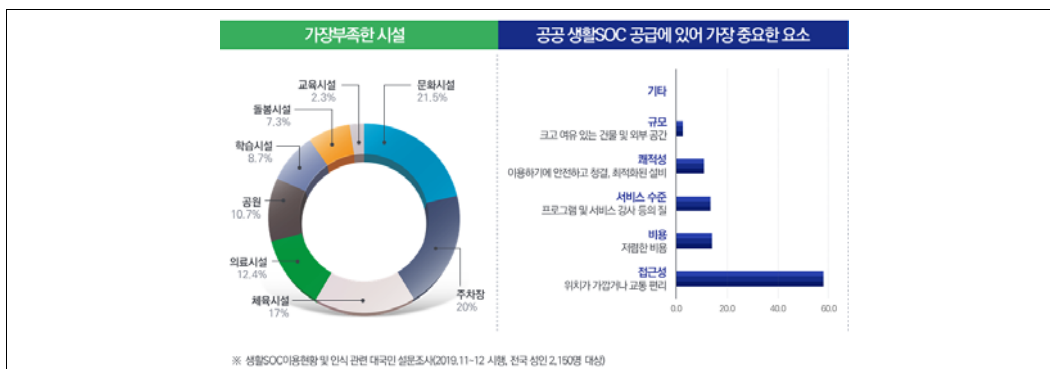
• 시공비와 기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원천 차단 효과, 순창 쌍치 출신 두 젊은 사업가 의기투합으로 역작 만들어...

출처 : 전북일보 (2020.12.20.),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98510>

7) 문체부, 전국 112개 초등학교에 VR 체육시설 보급(노컷뉴스, 2019-03-20, <https://www.nocutnews.co.kr/news/5121496>)

■ 경제적 풍요와 함께 국민의 복지 기대 수준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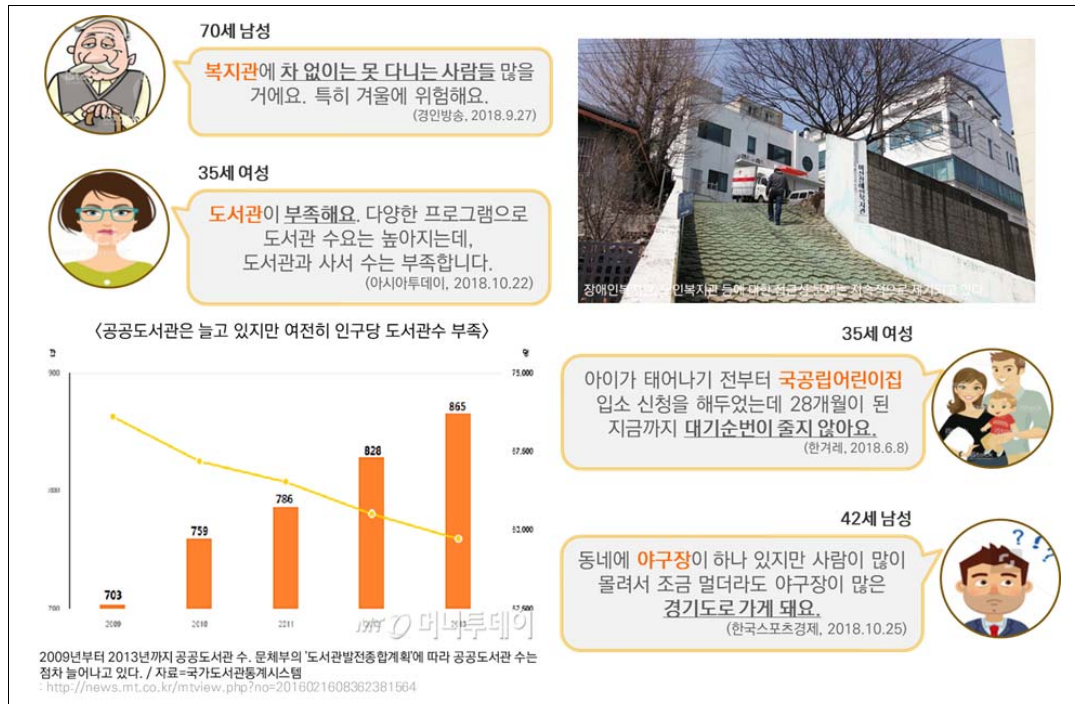
- 우리나라는 세계 GDP 순위 11위 수준(2018)이며 국민소득 3만불 이상의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30-50클럽 선진국 7개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제력을 갖추었으나, 삶의 만족도가 낮고 문화와 여가 측면에서도 삶의 질 수준이 낮음
 - 「2019년 세계행복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2019년 5.895점으로 54위 (Helliwell, Layard & Sachs, 2019:24-26)에 해당하며 UN 행복지수 57위/ 156개국이고 OECD 더 나은 삶 지수 29위/38개국 수준으로 여전히 하위권
 - 삶의 질 종합지수 10여 년 동안(06~15년) 약 11.8% 상승에 그쳤으며, 삶의 질 여론 조사에서 10점 만점 중 6.4점 정도의 낮은 만족도 보임
- 거주 및 일상 생활에 필요한 시설과 공간의 양적 충족이 향상되면서 주거만족도는 점차 향상되고 있으나 서비스의 질적 측면에서 지역밀착형 시설 수요 등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충족되지 않는 현실
 - 일상생활에서 공간환경, 거주환경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안전성, 보건성, 편리성, 쾌적성(WHO, 1961)에 해당하며 이중 생활편리성에 해당하는 접근성 요구 커짐



[그림 5] 생활환경에서 공간복지에 대한 인식

출처 :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2019.12.17. 생활SOC 정책컨퍼런스자료집, p.27.

- 도시민들이 느끼는 주거환경의 생활편리성은 지역의 서비스나 기관 교통 등 시설의 수준과 접근성 정도에 크게 좌우(최정민외, 2020:2)



[그림 6] 공간복지시설의 양적 충족만으로는 다양한 수요 변화에 대응 어려움

출처 : 성은영(2018),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마련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 자료집. p.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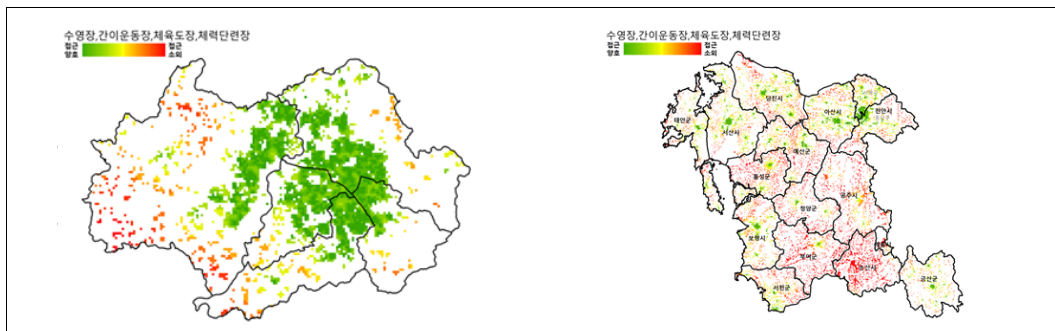
- 촘촘해진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비하여 전 국민을 복지의 대상에 포함하는 일상적 삶의 질과 관련된 공간복지 전달체계는 개별 시설 사업에 의존된 현실

2.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의 공간복지 서비스 실현

■ 지역에 따른 공간복지 서비스 여건에 큰 격차

- 도시와 농촌,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촌 읍지역과 먼지역 등 각 지역에 따라 공간복지 서비스 수준은 매우 상이

- 인구 밀집지역은 서비스 접근성 양호하나 기존 시설의 용량 부족하고, 인구 감소지역은 유헴시설이 증가하고 서비스 수요인구는 부족한 상황
- 대도시 지역에서도 인구밀집지역이나 신도시 지역은 인구급증으로 생활SOC가 부족한 반면, 원도심은 기존 시설의 노후화 및 인구 감소로 인한 신규시설 확충이 어려움



[그림 7] 생활체육시설의 지역간, 지역내 접근성 차이

출처 : 저자작성

- 지역별 특징과 지역별로 발생하는 공간복지시설 및 공간 활용의 문제점이 다르게 나타나므로(남지현 외, 2019), 효과적인 시설의 공급을 위해서는 지역 수요, 생활환경, 인구밀도, 인구구성, 공간복지시설 현황 등 다양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단위 계획 수립 필요

“인구소멸 위험도 따른 지역별 ‘맞춤 복지체계’로 전환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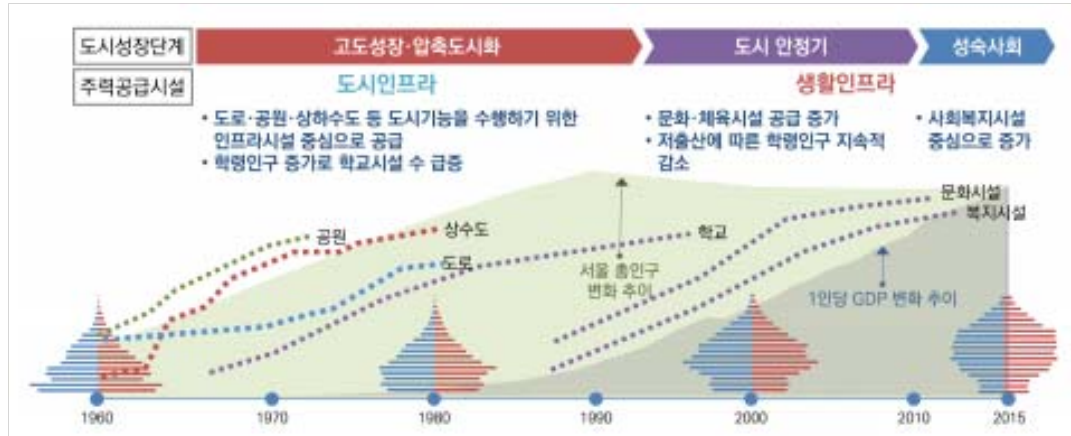
농촌인구 노인 비중 급증세 2020년 22% → 2040년 38%, 15~64세 66% → 53% 급감, 지역 재정능력 감소 악순환 자율차 등 4차산업기술 활용, 노인 특화 의료·이동서비스, 복지전달체계 전면개편 필요

인구소멸 위험 적은 대도시도 빅데이터 기반 지역수요 분, 고용·교육·교통 연계형 복지

출처 : 문화일보 (2019.6.18.),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61801032103311001>

■ 기존 공간복지시설의 유헴화 및 이용실태 변화

- 도시의 성장단계에 따라 시설의 공급해왔던 공간복지시설의 종류는 매우 다르며 성장기를 지난 도시들에서는 시기별 노후화된 시설이 발생하기 시작



[그림 8] 도시성장단계에 따른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 공급 변화

출처 : 맹다미 외 (2018), p.5

- 공간적·기능적·경제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했던 고도성장기에는 도시 기능에 필요한 기초시설인 도로, 공원 등 도시인프라와 학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학교시설 등이 대량 공급되어 수 십년이 지난 최근에는 수요 변화에 따른 유휴시설들이 발생
- 2020년 5월 1일 현재, 폐교된 학교는 전국 3,834개 교이며 서울 및 경기 지역 폐교도 114개교에 해당하고 1,387개 교가 활용되고 있거나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음⁸⁾
- 과거와 같이 공공에서 대량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공급·관리하는 방식은 물리적,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어 공간복지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공급방식의 다각화가 필요

양평군, 노후 생활SOC 3개 사업 추진

양평군은 경기도 ‘노후 생활SOC 개선 및 소규모 시설 확충사업’에 양평군 3개 사업이 확정됐다고 7일 밝혔다.

‘노후 생활SOC 개선 및 소규모 시설 확충사업’은 경기도 주관으로 도내 노후한 생활SOC 시설에 대해 개보수, 기능 보강 또는 시설 신설을 위한 사업비의 60% 이상을 지원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출처 : 경기도민일보(<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9939>), 20-06-07

8) 폐교정보,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http://eduinfo.go.kr/portal/theme/abolSchStatusPage.do>), 2020.12.15. 검색

■ 지역의 공간복지 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지역단위 서비스계획의 부재

- 다양한 지역의 여건에 따라 지속가능한 공급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수요 변화, 유지관리·운영비 증대, 시설 노후화에 따라 신규 시설의 공급 혹은 기존 시설의 재배치 등 부담가능한 정책 추진이 바람직
 - 도시기본계획의 공공시설계획, 도시관리계획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일부 시설에 국한되는 경직된 시설계획에서 탈피할 필요
 - 지속적 실태조사와 평가 등으로 계획을 재검토 하여 지역의 여건에 따라 지속가능한 공급 및 관리가 가능한 계획의 융통성 확보 필요
 -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재생 사업 등 공간복지시설 사업들을 해당 구역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 전체의 공간복지계획으로서 반영⁹⁾
-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시설 및 서비스 기능의 재편, 유휴시설의 재활용 등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사업을 재편함으로써 시설 기능의 중복성, 예산투입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 해소
- 중복되거나 과잉/유휴된 시설 기능 및 사업의 재편 시급하나 별도의 지역단위 공간서비스계획은 없는 상황

매년 10억씩 혈세 '꿀꺽'하는 공공시설...793개 중 '짚'이 없다

793개 짓는 데 26조 들였지만... 매년 평균 10억대 적자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적자는 해마다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각 지자체가 주민들의 생활·여가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국비와 자체 예산 등을 끌어모아 지은 공공시설 상당수가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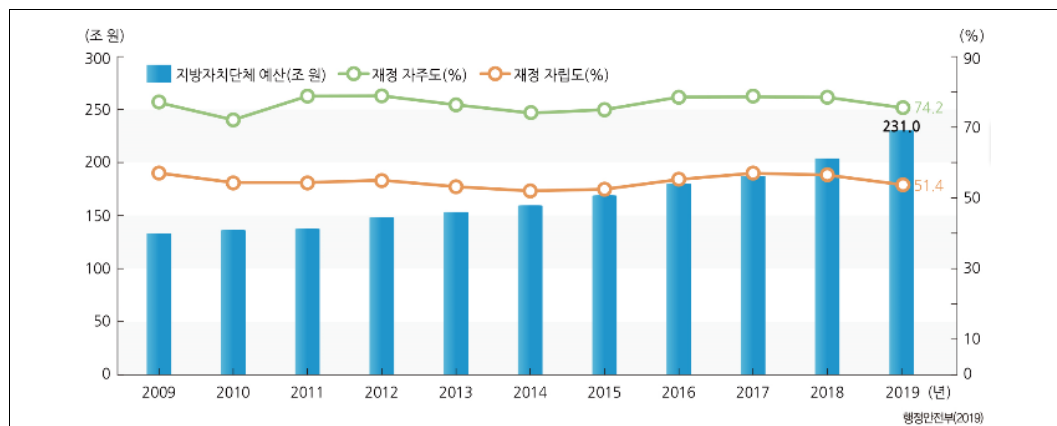
출처 : 세계일보, 2020-08-20, <http://www.segye.com/newsView/20200729520685?OutUrl=naver>

9)신규 도시개발지역에서는 개발계획수립 지침을 개정하여 생활SOC의 복합화를 체계화 하고, 도시재생 지역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생활SOC 현황분석을 통한 공급계획을 반영(류영국, 2020:14)

3. '지역 주도', 중앙 지원의 계획·사업 추진 기반 마련

■ 상향식(bottom-up), 지역맞춤형의 시설계획 추진 여건 변화

-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5년 이후, 도시계획에서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이 자립적으로 실현가능한 형태의 상향식 계획을 지향
 - 상향식 계획은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계획 패러다임은 외형적 지역 성장을 이룰 수는 있지만 실제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는 별개로 추진되었다는 반성에서 시작(강현수, 2013:105)
 - 이후 마을만들기(2000년대), 도시재생 사업(2010년대) 등을 통해 주민참여, 다양한 주체의 협력적 계획 추진을 통해 지역 고유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되어 옴
-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낮은 수준이며 이 또한 지역간 편차가 매우 커 지역마다 상향식 계획의 추진 여건이 매우 다른 상황



[그림 9]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재정자립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2019).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http://nationalatlas.ngii.go.kr/pages/page_1857.php, 검색일:20.12.15)

- 2019년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 자립도 51.4%이며, 17개 시도 중 10개 시도와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94%에 해당하는 213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50% 미만이어서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편¹⁰⁾

■ 지역주도 계획 추진의 한계

- 최근 도시재생 뉴딜사업, 생활SOC 복합화 사업¹¹⁾ 등 대규모 국비지원 사업에서 지역주도의 계획 수립을 유도하고자 상세한 메뉴판과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여 상향식 계획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
- 지역특성에 맞는 시설의 공급은, 철저히 지역여건과 수요에 기반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주민의 수요와 시설현황을 파악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구상하고 제대로 된 디자인을 해서 지속적인 운영 방안을 담아 계획·실행될 때 성과를 얻을 수 있음
 - 지역밀착형 생활SOC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구산동 도서관마을의 경우, 주민청원으로 건립이 제안된 2006년부터 은평도서관마을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건립·운영에 이르기까지 약 10여년이 소요를 통해 가능
 -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2008년 설립초기부터 도시전체 마스터플랜을 기획하고 계획·모니터링을 지원해온 영주시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 복지관 등의 공공건축 마스터플랜 역시 일관된 정책 추진 방향, 문화, 복지, 체육 등 다양한 분야 사업의 결합 추진 등을 통해 성과를 내기 시작
- 그러나, 공간복지 관련 시설 및 공간계획의 수립 및 사업 추진 주체인 지역은 접근가능한 객관적인 현황 자료나 전문성 있는 실태조사, 계획 수단 마련도 어려운 현실
- 지역주도의 공간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활용할 수 있는 공신

10)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입은 지방세 수입의 증가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자치단체 예산의 규모가 자체 수입의 증가보다 많아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며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조정을 통해 이를 개선하려고 있다.(국토지리정보원 (2019).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http://nationalatlas.ngii.go.kr/pages/page_1857.php, 검색일:20.12.15)

11) 지자체가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복합화하여 제안하면 정부가 보조율을 높이거나 학교시설 부지 활용, 도시공원 입지 규제 완화 조치 등을 통해 그 실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정부지원의 계획체계의 본격적 시행

력있는 자료와 프로그램의 생산과 적용 등을 비롯한 다각도의 정책적인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지역의 면밀한 현황 분석, 실태조사를 지원할 기준 및 방법, 자료 등의 체계적 지원 필요

- (기준 마련) 지역의 공간복지 수준을 평가하고 공간복지 대상과 지역을 설정할 수 있는 지표로서 국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분석자료를 지역과 공유
 - 일반적인 주거지의 최저기준으로 생활SOC를 공급하고, 시설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최저주거기준’과 함께 ‘최저 주거지기준’을 통합한 법률체계를 정비할 필요(류영국, 2020:14)
- (실증 자료와 분석 방법 지원)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집·관리 및 활용하고, 과학적 분석이 가능한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지역에서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방향 설정, 입지 분석 등을 통해 합리적인 전략 도출 가능하도록 지원 필요

■ 지자체의 지속적 관리·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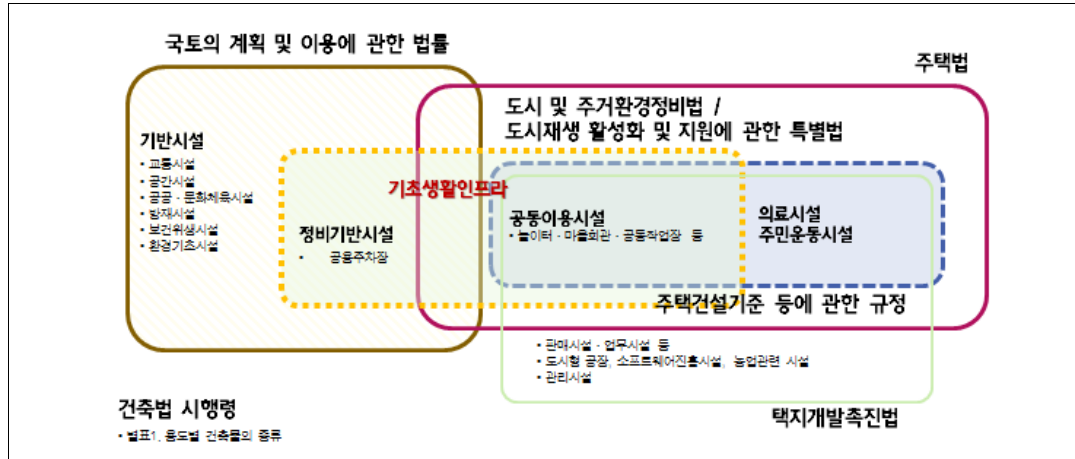
- 많은 지역에서 다양한 공공시설 사업이나 국비 지원 시설 사업 등을 통해 건립한 후 자체 수익구조 부재와 낮은 수준의 이용료 설정에 따른 만성적자가 발생하는 등 문제 발생에 대한 구조적 대안 마련 필요
 - 생활SOC 복합화에 따른 관리·운영 주체를 제도화하고, 다양한 생활SOC복합화 유형별 유지관리를 위한 생활SOC관리 사회적 기업이나 주민공동체가 해결하는 주민참여 관리·운영모델이 개발되어 생활SOC서비스가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구조 마련 필요(류영국, 2020:14)

Ⅲ (가칭)공간복지기본법 제정을 위한 관련 분야 법제 및 사례 분석

1. 관련 법제 검토

■ 공간복지시설의 범위

- 공간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과 공간복지를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과 공간”은 다양한 법률에 의해 정의될 수 있음 (표 2 참조)
 - 이러한 시설을 통칭하는 최근의 정책 용어로는 생활SOC, 기초생활인프라, 생활인프라 등이 있으며 이는 각각 총리훈령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국토교통부 훈령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등에 근거
 - 공간계획 최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의한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공공시설을 기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의 정비기반시설이 정의되어 있으며 공동주택의 공급 및 관리 기준 등에 초점하고 있는 「주택법」과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운동 시설 등이 별도로 정의
- 각 법률에 의한 공간복지시설은 조성 공간단위의 위계에 따라 명칭 및 범위에 차이가 있으며 기능과 서비스 대상이 유사하더라도 서비스 제공 범위 및 공급 목적 등에 따라 포함관계가 다를 수 있음 (그림 10 참조)



[그림 10] 각 법률 상 공간복지시설의 포함 관계

출처 : 성은영 외(2013), 노후주거지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현황 및 수준 분석, p.21.

[표 2] 공간복지시설 관련 법 및 종류

관련법률	구분	정의(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기반시설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도시·군계획시설	시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유원지, 학교, 운동장, 주차장, 공원, 녹지, 광장, 청소년수련시설
	공공시설	도로·공원·철도·수도
주택법 (제2조)	간선시설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基幹施設)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
	부대시설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복리시설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주민공동시설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주민운동시설, 주민교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도서관,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경로당,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 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이나 가정의례 또는 주민봉사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의료시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보건소지소·병원·한방병원 및 약국

관련법률	구분		정의(종류)
	주민운동시설		거주자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옥외·옥내운동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	공공시설		-어린이놀이터·노인정·집회소, 기타 주거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우체국, 일반목욕장, 종교집회장, 보육시설)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도시형공장, 벤처기업 집적 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농업관련 시설 -공공시설 등의 관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근린생활시설		판매 및 서비스 시설, 의료시설, 체육시설, 공공서비스시설, 집회시설, 관리 및 지원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종교집회장
	판매시설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노유자시설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수련시설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운동시설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체육관, 운동장
	정비기반시설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도시재생 기반시설	기반시설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공동이용 시설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도서관
	기초생활인프라		도시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출처 : 저자 작성, 자료 : 각 법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검색일: 2020.12.16

- 의료시설과 판매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 기능은 국토계획법의 도시계획시설 범위에 해당되며 이중 공간복지시설은 공간시설과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해당(표 3 참조)

[표 3] 도시계획시설 종류 및 관련법

도시계획시설 (53)		관 련 법
교 통 시 설 (11)	도 로	고속국도법, 도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주차장	주차장법
	자동차정류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유통촉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철 도	철도법, 도시철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궤 도	삭도 · 궤도법
	삭 도	삭도 · 궤도법
	운 하	-
	항 만	항만법, 어항법
	공 항	항공법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학원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 간 시 설 (5)	광 장	-
	공 원	도시공원법
	녹 지	도시공원법
	유원지	관광진흥법
	공공공지	-
유 통 공 시 설(9)	시 장	유통산업발전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축산법
	유통업무설비	유통산업발전법, 자동차관리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수도공급설비	수도법
	공동구	소방법,
	전기공급설비	전기사업법
	가스공급설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석유사업법, 송유관사업법, 소방법
	열공급설비	집단에너지사업법
	방송통신시설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방송법
공 공 문 화 체 육 시 설	운동장	체육시설의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청사	-
	학 교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도시계획시설 (53)		관 련 법
(10)	도서관	도서관법
	연구시설	-
	문화시설	공연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과학관육성법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공공직업훈련시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기본법
	체육시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규칙
방재시설 (8)	하천	하천법, 소하천기본법
	저수지	하천법, 댐건설및주변지역자원등에관한법률
	방풍설비	-
	방수설비	-
	방화설비	소방법
	사방설비	사방사업법
	방조설비	항만법, 어항법, 방조제관리법
보건생태 시설 (7)	유수지설비	하천법
	도축장	축산가공처리법
	공동묘지, 화장시설, 장례식장,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사등에관한법률
	장례식장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환경기초 시설 (4)	하수도	하수동법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수질오염관련시설	수질환경보전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폐차장	자동차관리법

출처: 국토교통부 정책정보, 도시계획시설 (https://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id=63, 검색일: 20.12.15)

- (기초생활인프라) 공간복지시설과 가장 유사한 시설의 분류 및 범위는 도시재생법의 기초생활인프라에 해당
 - 기초생활인프라는 거주지 근린에서 일상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수요자와 공급자의 입

장을 모두 고려하여 문화, 학습, 교육, 돌봄, 의료, 체육, 휴식, 교통, 생활편의 기능으로 구분(성은영 외, 2019:22)

- 유사 기능의 시설도 서비스 범위와 규모 등에 따라 도시재생의 기반시설로서 공급 가능하도록 차량이나 도보의 교통수단으로 이동 가능한 지역거점시설과 도보이용 가능 시설인 마을단위 시설로 구분하여 **어느 지역이든 적용가능한 시간거리 개념의 국가적 최저기준을 수립**(국가 도시재생기본방침 제7장)

[표 4] 공간권역에 따른 기초생활인프라 시설의 구분 및 개별 근거법

공간 단위	기능	시설종류	정의	근거법	시설 구분
지역 거점	문화	공공문화시설	국민이 문화·여가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전시·공연하는 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문화예술회관 전시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
	학습	공공도서관	국민의 정보이용·학습·교양 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료를 제공·수집하는 시설	도서관법 제2조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1	공립도서관 (국립·도립, 교육청)
	돌봄	사회복지시설	노인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및 노인성질환에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노인복지법 제34조·제36조 시행규칙 별표7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의료	보건소	국민의 질병 예방·진료·공중보건을 위하여 각 시·군·구에 설치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시행령8조	보건소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모든 진료과목이 종합적으로 설치된 병원으로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 및 이중에서 지정된 응급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의 3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체육	공공체육시설	국민의 체육활동을 위해 설치된 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경기장 체육관 수영장
마을 단위	휴식	지역거점공원	국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녹지 등이 설치된 시설	공원녹지법 제2조	10만㎡ 이상 공원 (묘지공원 제외)
	교통	마을주차장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	주차장법 제2조	시·군·구 운영 공영주차장
	학습	도서관	정보이용·학습·교양 등에 이바	도서관법 제2조	공공도서관 ,

공간 단위	기능	시설종류	정의	근거법	시설 구분
			지하기 위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설치된 시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1	사립도서관, 작은도서관
	돌봄	어린이집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	영유아보육법 제2조	국공립어린이 집, 민간어린이집
		마을노인 복지시설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 및 지역노인의 자율적인 여가활동을 위해 제공하는 장소	노인복지법 제36조	경로당 노인교실
	교육	유치원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 되는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초등학교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초등학교
	체육	생활체육시설	국민의 체육활동을 위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설치된 시설	체육시설설치이용법 제6조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수영장 간이운동장
	휴식	근린공원	국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설치된 시설	공원녹지법 제2조	도시공원 (묘지공원 제외)
	의료	기초의료시설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의 1	의원
			약사나 한약사가 수요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를 하는 장소	약사법 제2조	약국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기관	지역보건법 제14조	건강생활지원 센터
	생활 편의	소매점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해 근린에 필수적인 시설	건축법	생필품 구매를 위한 소매점
		기타 생활편의시설	-	폐기물관리조례	폐기물 보관시설

자료 : 각 법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출처 : 성은영 외(2019),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자립적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및 관리 지원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p.28.

■ 법령의 형식 및 체계

- (복지관련 법) 복지 대상이 명확하여 법률명에 “복지”가 포함된 복지에 관한 현행 법률은 20개이며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주로 특정 계층이나 그룹의 복지나 복지사업에 관한 법률들이 대부분임
 - 노인, 아동, 장애인, 장애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복지를 규정한 법률들은 아동복지법은 시설의 운영에 중점적으로 규율하고,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은 주로 국가의 주의규정과 재량규정으로 구성 한계(이중호, 2015:468)
 - 경찰공무원이나 군인, 소방공무원 등 일부 특정 직업군 등을 대상으로 한 법률은 기본법 형태로 실태조사, 기본계획, 지원서비스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표 5] 복지 관련 법 및 소관부처

법률명	소관부처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경찰청, 해양경찰청)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노동부)
군인복지기금법	(국방부)
군인복지기본법	
예술인 복지법	(문화체육관광부)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무부)
긴급복지지원법	(보건복지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산림청)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청)
청소년복지 지원법	(여성가족부)

출처 : 각 법률 (국회법률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검색일 : 2020.12.15.)

- (시설과 공간 관련 법) 시설범위 검토를 통해 살펴 본 공간복지시설과 관련된 법률들은 대부분은 국토 및 도시공간을 면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실제 시설 및 공간에 관련된 개별 종합 법률은 소수에 불과
 - 도시공원법, 도서관법, 체육시설법 등이 이에 해당하며, 시설의 확충, 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도시공원법 및 체육시설법의 경우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도서관법의 경우 도서관의 종류 및 기준 등에 초점

[표 6] 시설과 공간관련 법 및 소관부처

구분	법령명	제정일	소관부처	목적
공간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2020. 3.24	교육부 (교육시설과)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여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교시설의 활용 증대를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공항시설법	2017. 3.30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공항·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산업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980. 60.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2020. 1.1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
	도서관법	1994. 3.24	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 정책기획단)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 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989. 7.1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 산업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善用)에 이바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6. 7.25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소규모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그 위험시설의 정비계획수립, 긴급안전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

출처 : 각 법률 (국회법률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검색일 : 2020.12.15.)

• (기본법 체계 검토) 공간과 복지 분야에 대한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체계를 정하는 법률로서 공간복지법은 기본법¹²⁾ 체계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

- 기본법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률의 분야 또는 계열에서 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입법의 체계화 및 용이한 이해, 그리고 입법 경제를 도모하는 입법유형 또는 입법기술을 의미(황승흠, 2010:246)
- 공간 분야 기본법은 국토기본법과 건축기본법이 대표적이며, 각각 국토와 건축에 관한 정책을 큰 틀에서 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복리 향상을 목적으로 함
- 시설관련 기본법으로서 유일하게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기본법」이 제정되었으나 이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국한
- 복지분야 기본법은 청소년 기본법, 청년 기본법 등이 있으며 청년기본법의 경우, 범부처 추진 및 총괄조정을 위해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로 제정되었으며,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그리고 각종 지원 시책을 담음

[표 기] 공간 및 복지 관련 기본법

구분	법령명	제정일	소관부처	목적
공 간	건축기본법	2008. 6.22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2009. 8.7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 과)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 및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국토기본법	2003. 1.1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
	지속가능한	2020.	국토교통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12) 기본법은 정책입법·프로그램법으로서의 기능과 성격을 가지는 독특한 입법형식, 즉 당해 정책의 이념이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고 그에 의거하여 시책을 추진하거나 제도의 정비를 도모하는 입법유형(박영도, 2008:127; 황승흠, 2010:245 재인용)

구분	법령명	제정일	소관부처	목적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1.1.	(시설안전과)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복 지	건강가정 기본법	2005. 1.1.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
	건강검진 기본법	2009. 3.22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국가건강검진의 계획과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
	국민여가활성화 기본법	2015. 11.19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
	보건의료 기본법	2000. 7.13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
	사회보장 기본법	1996. 7.1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책과)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양성평등 기본법	1996. 7.1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대한민국헌법」의 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
	저출산·고령 사회기본법	2005. 9.1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
	주거기본법	2015.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구분	법령명	제정일	소관부처	목적
		12.23	(주택정책과)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
	청년기본법	2020. 8.5.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과)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청소년기본법	1993. 1.1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복지기타	경찰공무원보건의료기본법	2012. 8.23	경찰청(복지정책담당관)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경찰공무원의 위상과 사기를 높이고 치안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군인복지기본법	2008. 3.1.	국방부 (복지정책과)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군의 사기를 높이며 나아가 군인으로 하여금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근로복지기본법	2002. 1.1.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2012. 8.23.	소방청 (소방정책과)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2007. 7.18.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 각 법률 (국회법률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검색일 : 2020.12.15.)

2. 법정 시설계획 검토

■ 도시·군 기본계획

- 시·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며, 도시·군관리 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임(「국토계획법」 2조)
 - 상위 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시·군이 지향하여야 할 미래상을 제시하고, 정책계획과 전략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지침적 계획으로서 다른 법률에 의해 수립되는 각 부문별 계획이나 지침에 우선함(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1장 3절)
- 계획대상인 물리적 환경으로 공간구조, 생활권 설정과 인구배분, 토지 이용 및 개발, 환경의 보전 및 관리, 기반시설, 공원·녹지, 경관 등을 다루고 있음
 -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을 통해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과 작성원칙, 부문별 계획수립기준 및 수립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 (수립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목표년도) 수립 시점으로부터 20년 기준 (5년 단위 정비)
- (계획내용) 1. 지역의 특성과 현황 2. 계획의 목표와 지표의 설정 (계획의 방향·목표·지표 설정)
3. 공간구조의 설정 (개발축 및 녹지축의 설정,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
4. 토지이용계획 (토지의 수요예측 및 용도배분, 용도지역 관리방안 및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
5. 기반시설 (교통, 물류체계, 정보통신, 기타 기반시설계획 등)
6. 도심 및 주거환경 (시가지정비, 주거환경계획 및 정비)
7. 환경의 보전과 관리 8. 경관 및 미관 9. 공원·녹지 10. 방재·안전 및 범죄예방
11.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 (고용, 산업, 복지 등)
12. 계획의 실행 (재정확충 및 재원조달, 단계별 추진전략)

출처: 국토계획법(법률 제16902호) 및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133호)

-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에서 공간복지시설과 관련된 내용은 전 부문에 걸쳐 있으며, 일부 항목에서는 공간복지시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
 - ‘공간구조의 설정, 토지이용계획, 도심 및 주거환경, 공원·녹지,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 생활권 계획’ 등 6개 부문에서 공간복지 관련 계획원칙 또는 기준 제시
 - (공간구조의 설정) 생활권 설정시 생활서비스의 공간적 제공범위를 고려하고, 인구밀도 계획시 학교,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을 고려하여 수용가능한 인구배분계획을 세우도록 함

(4-3-2)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계획

- (1) 생활권설정: ③ 생활권의 경계는 생활서비스의 공간적 제공범위와 물리적·사회문화적 공간의 동질성 및 각종 자료 취득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2) 인구배분계획: ③ 생활권별 인구밀도계획시 학교,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을 고려하여 수용가능한 인구배분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출처: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133호)

- (토지이용계획) 시가화용지와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해서 기반시설의 용량을 고려하며, 도시재생계획의 내용으로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하도록 함

(4-4-3) 용도구분 및 관리

- (2) 시가화용지: ③ 시가화용지에 대하여는 기반시설의 용량과 주변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경관을 유지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비 및 관리방향을 제시한다.
- (3) 시가화예정용지: ② 시가화예정용지는 당해 도시의 발전에 대비하여 개발촉진과 개발가능지를 중심으로 시가화에 필요한 개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용지이며, 장래 계획적으로 정비 또는 개발할 수 있도록 각종 도시적 서비스의 질적·양적 기준을 제시한다.
- (5) 도시재생계획의 내용: ④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및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방향성 제시 ⑤ 활성화지역 우선순위, 활성화지역의 지정 등에 대한 도시골격과 발전축 도시공간구조, 기반시설 등을 고려한 방향성 제시

출처: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133호)

(4-6-2) 도심 및 시가지 정비

- (2) 농촌지역을 포함하는 시·군의 경우 도시와 농촌간의 상호 유기적인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 ① 도시지역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및 역세권개발, 신·구 시가지간의 균형발전 등에 대한 개발방향을 설정한다.
 - ㉠ 구도심활성화를 위한 개발전략 및 실천수단을 강구한다.
 - ㉡ 구시가지내 주거지역의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개발전략 및 실천수단을 강구한다.
 - ② 비도시지역의 경우 취락의 정비 및 도시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개발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4-6-3) 주거환경계획

- (2) 주거환경의 조성시에는 소규모 지구별로 편의·문화·교육공간을 배려하는 등 지구내 커뮤니티 형성에 기여하도록 한다.

출처: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133호)

- (도심 및 주거환경) 농촌지역을 포함하는 시·군의 정비 방안으로 구시가지 내 주거지역의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도록 하며, 주거환경 조성시 소규모 지구별로 ‘편의, 문화, 교육공간’을 배려하도록 함
- (공원·녹지) 생활권별로 공원·녹지의 이용현황을 분석하고, 목표연도의 지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며, 공원계획 역시 주민의 이용권과 이용형태에 따라 정하며 근린공원을 위주로 하고 있음

(4-9-3) 공원·녹지체계 형성

- (4) 생활권별로 공원·녹지분포와 이용현황을 분석하고 공원·녹지의 지표를 설정한다.
 - ① 공원·녹지의 규모·분포와 이용권·접근성·연계성 및 미조성 공원·녹지시설 현황 등을 분석한다.
 - ② 계획된 공원·녹지시설의 조성비율을 고려하여 1인당 조성공원면적, 도시전체의 공원·녹지비율 등 목표연도의 공원·녹지지표를 제시한다.

(4-9-4) 공원·녹지시설의 설치

- (1) 공원계획: ③ 공원의 위치·규모 및 기능의 배분은 주민의 이용권(利用圈), 이용형태에 따라 목표년도 및 단계별 최종연도의 인구규모 및 인구 배분계획에 따라 정하되 근린공원 위주로 한다.

출처: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133호)

-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 의료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체육으로 구분하여 개별 시설의 공급방향 및 시설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계획의 기준으로 ‘인구’를 명시하고 있으나 계획의 공간범위나 공급 기준을 포함하지 않음.

(4-11-2) 역사·사회·문화 개발계획

- (1) 의료보건: 의료복지 및 의료시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 (2) 사회복지: ① 계획인구와 시·군의 재정 기타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탁아소, 유아원, 양로원, 모자보건 및 보건시설, 심신장애인 수용시설, 노인복지시설, 직업훈련원 등 시설의 공급방향을 설정한다.
- (3) 교육: ① 취학대상인구를 예측하고 생활권계획에 따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각종 교육시설계획을 수립한다.
- (4) 문화·체육: 주민의 정서함양과 건강 및 여가선용을 위하여 또는 시·군의 문화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구계획에 따라 도서관·시민회관·생활과학관·극장·체육관·운동장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출처: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133호)

- (생활권 계획) 생활권의 구분과 계획 작성시 주민의 일상생활활동을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주요 생활인프라 배치전략을 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단, 생활권의 설정 및 생활권계획 작성은 자치단체의 선택사항으로 필요에 따라 수립할 수 있음

4-13-1. 생활권의 구분

- (1) 생활권의 구분은 도시의 규모에 따라 달라 질수 있으며, 일상 또는 근린(소)생활권, 권역(대)생활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 (2) 일상생활권은 주민의 일상생활활동(통학, 사교모임, 근린공공서비스, 장보기 등)이 이루어지는 정도로써 동, 읍, 면이 1개 이상인 규모로 볼 수 있으며 특광역시, 대도시, 일반 시·군 모두 적용 가능한 생활권이다.
- (3) 권역생활권은 자치구(구), 군이 1개 이상으로, 특광역시, 대도시에 적용가능한 생활권이다.
- (4) 모든 자치단체가 위계적으로 생활권을 권역, 일상생활권으로 의무적으로 구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지역에만 생활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4-13-2. 생활권계획의 성격 및 범위

- (1) 생활권계획은 부문별 계획의 하나로서, 전체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을 생활권별로 상세화한 계획이다.
- (2) 공간적 범위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 및 생산활동(통근, 통학, 여가, 친교, 쇼핑, 업무 등)이 이루어지는 범위로 한다.
- (3) 지역의 생산 및 생활환경 개선과제와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 (4) 생활권계획은 모든 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것은 아니며, 지역의 생활권 단위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작성할 수 있다.

4-13-3. 작성 원칙

- (1)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초조사, 주민계획단 과제 도출, 생활권 발전비전 및 공간구상, 생활권 계획지표,

생활권 및 발전전략, 주요 생활인프라 배치전략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일상생활권계획

- ① 중심지 및 주거지관리, 대중교통, 가로환경, 경관 및 미관, 생활인프라시설, 지역특화시설, 계층별(영유아, 노인, 여성)필요시설, 생활안전, 지역문화교육 및 역사보존 관련 분야 등에 생활권의 발전 전략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출처: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133호)

[표 8] 도시·군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수립기준과 공간복지시설 연관성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4장)

부 문	내 용	공간복지시설과 직접적 연관
1. 지역의 특성과 현황	기초조사를 통한 시·군의 특성과 현황 파악	
2. 계획의 목표와 지표설정	① 목표: 미래상 전망, 달성을 위한 기본목표 및 실천전략 ② 지표: 인구, 경제, 환경 부문 지표 설정	
3. 공간구조의 설정	① 공간구조의 설정: 진단 및 개편방안 ②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계획	○
4. 토지이용계획	① 토지이용의 기본원칙 및 현황분석 ② 용도별 수요량 산출 ③ 용도구분 및 관리	○
5. 기반시설	① 교통계획:기본원칙 및 교통시설 접근성 제고 ② 물류계획 ③ 정보통신계획 ④유비쿼터스도시계획 ⑤ 상·하수도	
6. 도심 및 주거환경	① 도시재생계획: 목적, 고려요소, 수립대상·방향·내용 ② 도심 및 시가지 정비 ③주거환경계획	○
7. 환경의 보전과 관리	① 기본방향 ②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③ 환경친화적 개발의 유도 ④대기환경 및 수환경의 보전 ⑤ 폐기물 ⑥ 에너지	
8. 경관 및 미관	① 기본원칙 ② 경관계획의 성격 ③ 경관계획의 구성 및 수립기준	
9. 공원·녹지	① 기본원칙 ② 계획의 방향 ③ 경관계획의 구성 및 수립기준 ④ 공원·녹지시설의 설치	○
10. 방재·방법 및 안전	재해·범죄의 취약성 대응을 위한 계획원칙	
11.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	① 경제·산업 관련 계획 ② 역사·사회·문화 개발계획: 의료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체육, 문화재·역사유적	○
12. 계획의 실행	투자우선원칙 설정과 사업계획 수립, 물량계획 및 집행상황 점검 체계 구성 등	
13. 생활권 계획	① 생활권의 구분 ② 생활권계획의 성격 및 범위 ③ 작성 원칙	○

출처: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133호)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도시·군기본계획과 공간복지계획의 정합 방향 검토

- (장기성) 20년 후의 도시의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미시적인 공간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음
- (계획내용의 유연성) 원칙과 기준 중심의 기술로 공간계획의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도시·군관리계획 차원에서 구체적인 상황과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¹³⁾
- (최상위 공간계획) 각 분야의 부문별 정책이나 계획 등을 공간구조 및 입지와 토지이용을 통해 통합·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¹⁴⁾ 거시적 차원의 공간계획 원칙을 다룸
- (위상 문제) 도시기본계획이 법정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비법정계획인 행정계획들이 우선시 되고 있어 위상의 문제가 제기됨¹⁵⁾
- (원칙 중심 시설계획) 시설계획의 기반이 되는 인구배분과 토지이용, 시가지 정비, 주거환경 정비 등의 단위에서 방향을 다루며, 주민이 일상적으로 체감하는 공간복지시설에 대해 부문별 기준을 제시하나 원칙 수준에 머물며, 구체적이지 않음
- (선택적 생활권계획) 개별 시설에 대해 일상생활권 단위로 공간복지시설을 계획할 수 있는 생활권 계획은 필수사항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음

■ 도시·군관리계획

- 시·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임(「국토계획법」 2조)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132호)’을 통해 계획의 수립기준, 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과 방법 및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해제신청 처리절차 등을 정함

13)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133호) 제1장 제3절 6

14)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133호) 제1장 제3절 7

15) 이주일, 김인희(2010), 「국토 및 도시계획체계의 재정립을 위한 국제비교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p.231.

-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군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으로서 지위를 가짐(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1장 3절)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일관된 체계로 종합화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하는 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

(수립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목표년도) 수립 시점으로부터 10년 기준 (5년 단위 정비)

(계획내용)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출처: 국토계획법(법률 제16902호)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132호)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목적과 의의, 수립기준은 도시기본계획의 실행과 밀접하며, 공간복지시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부문별 계획에 나타남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계획, 기반시설계획, 도시개발계획, 경관 및 안전계획’ 등 4개 부문에서 공간복지와 직접 연관된 계획원칙 또는 기준을 제시함

3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계획

제1장 용도지역계획

제1절 기본원칙

3-1-1-1. 용도지역계획은 합리적인 공간구조의 형성, 교통계획, 기반시설 배치계획, 주거환경보호 및 경관 등과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시·군의 규모별 또는 시가지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지정하고, 도시기능수행과 효율적인

교통처리 및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3-1-1-5. 가구가 확대되고 소득증대에 따라 주거면적이 확대되는 등 토지수요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야 한다.

(1) 주거지역은 도시·군기본계획상에서 제시된 생활권계획체계를 근간으로 하여 인구배분계획, 교통계획, 공급처리 시설계획, 교육시설계획 등의 생활편의시설계획과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제2절 주거지역

3-1-2-1. 일반적 고려사항: (1)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 유지 및 적정 주거밀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고, 일조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가급적 정형화하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시설, 생활용품의 구매시설, 기타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의 편리성을 확보하는 등 주민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계획한다.

출처: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132호)

- (용도지역계획) 용도지역계획의 일반원칙과 주거지구 계획원칙을 통해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교육시설, 생활용품 구매시설, 공공시설로의 접근성 및 이용의 편리성 확보를 계획원칙으로 제시함
- (기반시설계획) 일반원칙으로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시설물 계획을 수립하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기준 및 설치·구조기준은 「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 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기반시설의 규모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함

제4편 기반시설계획

제1장 일반원칙

4-1-1.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시설물별 현황분석, 수요추정, 입지판단 및 사업시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4-1-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기준 및 설치·구조기준은 「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1-3. 기반시설은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규모의 과대 또는 과소로 인하여 시설관리상의 지장이나 주변에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모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3장 공간시설계획

제2절 공원

4-3-2-2. 공원의 입지는 접근성, 안전성, 쾌적성, 편의성, 시설의 적지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4-3-2-3. 공원면적은 주민 1인당 6제곱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공공·문화체육시설계획

제1절 일반원칙

- 4-5-1-1. 거주자의 일상적 생활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시설의 입지와 시설체계에 기초하여 시설수·규모·면적을 검토하여 배치한다.
- 4-5-1-2. 시설물의 입지를 계획할 때에는 주변 여건과 시설수요의 변화와 관리방식, 다른 시설과의 관계 등을 검토한다.
- 4-5-1-3. 2 이상의 인접된 간선도로로부터 도보거리내에 입지시킨다.
- 4-5-1-4. 주거지 간선도로 또는 주보행자도로의 결절점에 위치하도록 한다.
- 4-5-1-5. 대중교통수단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거지에 분산배치하기 보다는 기능이 연계되는 편의시설끼리 서로 인접시켜 집중 배치한다.

제2절 학교

- 4-5-2-1.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생활권과 연계하여 적정하게 배치하고, 대학은 주변의 토지이용 및 교통수단과의 접근을 고려하여야 한다.
- 4-5-2-2. 초등학교는 생활권의 중심과 근린생활권 공원과 연접하여 배치함으로써 주민의 생활공간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4-5-2-3. 학교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절 체육시설

- 4-5-3-1. 체육시설은 생활권별 계획인구에 필요한 수요량을 추정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 4-5-3-2. 근린생활권내 체육시설은 실외 체육시설 위주로 계획하여야 한다.
- 4-5-3-4. 체육시설은 가급적 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제4절 공공청사

- 4-5-4-1. 공공청사는 근린공공시설과 공공업무시설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 (1) 근린공공시설 :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분국, 보건지소
 - (2) 공공업무시설 : 시·군·구청,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업무에 필요한 시설
- 4-5-4-2. 근린공공시설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지구중심부에 상호연접하여 배치하며 근린광장을 그 중심부에 배치하도록 한다. 근린공공시설은 생활 공간의 중심지로 다수인이 집산하므로 행정기능과 상호 연계되도록 배치하여 가급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4-5-4-4. 공공업무시설은 주민의 이용과 시설의 기능적 보완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유사기능이 집단화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제5절 문화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

- 4-5-5-1. 지역의 특성과 기능에 따라 필요시설의 수요를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입지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한다
- 4-5-5-2. 사회복지시설은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입지를 정하고 관련 유사시설을 집단화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특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4-5-5-3. 규모가 큰 도서관 또는 본관은 도심부에 배치하여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하고 그 위치가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장소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출처: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132호)

- 공간시설(공원, 녹지, 수변공간) 과 공공·문화체육시설에 대한 고려사항을 제시하며, 공원의 경우 1인당 면적(6제곱미터 이상) 확보, 공공문화체육시설의 경우 인구와 이용자 특성, 시설위계,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수요와 입지 및 시설형태에 대한 상세한 기준을 제시함
- (도시개발계획) 개발계획 시행시 기존 기반시설 용량이 부족할 경우 개발사업지역에서 확보하며, 신시가지 개발계획은 기존 시가지의 기반시설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함

제5편 도시개발계획 | 제2장 신시가지와 기존시가지의 연계화

제1절 시가화용지의 개발

- 5-2-1-2.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기존의 기반시설중 용량이 부족한 시설은 개발사업지역에서 확보하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5-2-2-5. 신시가지의 개발계획은 기존 시가지의 각종 기반시설 및 토지이용과의 연계 등 기존시가지와 조화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출처: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132호)

- (경관 및 안전계획) 범죄관련 환경요소를 제거하고 밝은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청소년들이 자연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학습·놀이·운동 및 여가공간을 확보하고, 각종 도시·군계획시설을 공개하여 공동체의식을 고취하도록 함

제6편 경관 및 안전계획 | 제2장 안전계획 - 제3절 방범계획

- 6-2-3-1. 도시·군관리계획수립에 있어 각종 범죄 유발가능성이 있는 환경요소를 제거하고 밝고 명량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며, 인간성을 유지·회복시킴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 일반기준

- ③ 청소년들이 자연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학습·놀이·운동 및 여가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 ④ 이웃과의 공동체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각종 도시·군계획시설을 공개하여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출처: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132호)

[표 9] 도시·군관리계획 내용과 공간복지시설 연관성

부 문	내 용	공간복지시설과 직접적 연관
3.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계획	① 용도지역계획	○
	② 용도지구계획	
	③ 용도구역계획	
4. 기반시설계획	① 일반원칙	○
	② 교통시설계획	
	③ 공간시설계획 (공원, 녹지, 수변공간)	○
	④ 유통·공급시설계획	
	⑤ 공공·문화체육시설계획 (학교, 체육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	○
	⑥ 보건위생시설계획	
	⑦ 환경기초시설계획	
	⑧ 집행계획	
	⑨ 도시·군계획시설의 재검토	
5. 도시개발계획	① 일반원칙	
	② 신시가지와 기존시가지의 연계화	○
6. 경관 및 안전계획	① 경관계획	
	② 안전계획	○
	③ 방법계획	

출처: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132호) 3-6편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도시·군관리계획과 공간복지계획의 정합 방향 검토

- (법적 구속력) 도시·군기본계획의 구상을 공간에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유연성을 띠는 도시·군기본계획과 달리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의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계획임
- (계획기준의 구체성) 도시·군기본계획의 목적 및 계획방향을 기반으로, 토지이용에서 개별 시설의 입지 및 조성방식, 공급기준에 이르는 계획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직접적 영향력) 도시·군관리계획에서 결정된 용도지역에 적정한 수준으로 개발행위가 허용되고 공간복지시설을 포함한 각종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므로, 생활환경에 일차적인 영향을 미침

- (관리수단의 한계) 도시·군관리계획의 한 부문인 지구단위계획은 공간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계획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으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계획이 수립·시행될 때 종합적으로 사업내용을 조율할 수 있는 지침이 부재함. 또한 지구단위계획이 모든 지역에 수립될 수 없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에서 제시하는 생활환경과 부문별 시설에 대한 구체적 계획원칙을 실행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 도시재생전략계획

- 쇠퇴하는 도시를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도시재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전략
 - 국가 도시재생전략으로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의 계획임(「도시재생법」 2조)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및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014)’을 통해 전략계획의 내용, 작성기준과 방법을 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

- (수립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 (목표년도) 10년 단위 수립 (5년 단위 정비)
- (공간범위) 도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
- (계획내용) 1. 계획의 목표 및 범위 2.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3. 쇠퇴진단 및 물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여건 분석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
- 5의2. 노면전차 등 대중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개선·확충을 통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간 또는 주변지역과의 연계방안
6.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방안 7. 지방정부 재원조달 계획
8. 지원조례, 전담조직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제도 발굴
9.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을 위하여 수립하는 사업 계획

출처: 도시재생법(법률 제 17171호) · 국토교통부(2014),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참조 정리

-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실질적인 공간계획은 전략과제의 공간적 배치(기본구상)와 활성화지역 선정에 초점함
 - 전략계획은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물리적 계획요소와 경제·사회·문화, 행정·재정, 프로그램의 계획 및 운영 등 비물리적 계획요소를 모두 고려하고, 이들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함(‘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1장 3절)
 - 도시 쇠퇴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재생 전략을 도출하고, 기본구상을 통해 목표달성 과제를 도시공간상에 배치하며, 지역역량을 고려하여 적정한 개수로 활성화지역을 지정해야 함(‘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4.1)
-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 가운데 공간복지시설은 기초조사와 세부계획에 부분적으로 반영되어 있고, ‘도시재생기반시설 정비 등에 대한 계획’ 항목에는 시설 종류 등 계획 수립시 고려사항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음

제2장.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의 내용과 방법

2-2-2. 기초조사의 범위는 전략계획 수립 대상지역 전체로 하며, 읍·면·동을 기준으로 항목별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쇠퇴의 정도가 심각하여 보다 상세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보다 세밀한 공간적 범위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예시1] 기초조사 항목

- ① 일반현황: 관련계획, 인구, 공간구조, 토지이용(근린서비스: 인구당 근린서비스 업종 비율, 근린생활시설 증감비율 등), 건축물, 에너지, 기초생활인프라
- ② 도시잠재력: 산업특성(사업체수, 종사자수, 산업분포, 상권), 지역특성(역사자원, 문화자원, 인적자원, 관광자원, 활용가능한 공공자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필수항목 외에는 별도 운영가능

출처: 국토교통부(2014),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pp.4-5.

- (기초조사 내용) 기초조사의 범위를 수립 대상지역 전체로 하며, 읍·면·동 단위 또는 보다 세밀한 공간적 단위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기초조사 항목 가운데 근린서비스 관련 토지이용 및 기초생활인프라를 포함하나 필수 항목은 아님¹⁶⁾¹⁷⁾

16) ‘국가 도시재생기본방침’은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저소득층노후주거 밀집지역 등의

- (쇠퇴진단 및 여건분석) 세부계획 수립 단계에서 물리적 환경 및 생활기반에 대한 쇠퇴수준과 잠재력을 조사하고, 이를 도시 전체 및 생활권 단위로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예시의 성격으로 필수요건은 아님(지자체 여건에 따라 별도 운영가능)

제3장. 세부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 제2절. 쇠퇴진단 및 여건분석

3-2-1. 도시쇠퇴의 양상 및 원인을 경제·사회·문화·물리적 구조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술하고, 도시의 잠재력과 자원을 정량적으로 또는 정성적으로 가감없이 분석하여야 한다. (예시4부터 예시7까지 참조)

3-2-2.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도시 내에서 생활권 단위나 또는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한 일정 범위의 권역을 설정하여 도시쇠퇴의 양상 및 원인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 도시재생의 방향을 달리 도출하도록 한다.

[예시6] ○○시 쇠퇴진단(정량적 분석) - 도시평균값 및 생활권별로 다음 지표값 제시

- ① 쇠퇴진단: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적 환경(노후주택비율, 신규주택비율, 공가율, 주택보급율, 1인당 도로연장)
- ② 잠재력: 산업경제, 물리환경(기반시설 비율), 생활기반(1인당 공원면적, 도시 지역 내 녹지비율, 자전거도로 비율, 도로밀도), 사회문화기반

- ③ 종합: 지표별 비교를 통한 종합화
- ④ 쇠퇴진단도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별도 운영가능



생활권·집계구별 쇠퇴진단도

| 제3절.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3-3-2. 도시쇠퇴현황 및 도시잠재력에 대한 과학적인 진단을 토대로 전략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도시재생전략을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도출한다.(예시8 및 예시9 참조)

3-3-3.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생활권 단위 또는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한 일정 범위의 권역을 별도로 설정하고, 개별 권역별 방향성을 제시하는 도시재생기본구상을 수립하고, 이 도시재생기본구상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도시재생전략을 수립한다.

[예시9]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세부전략 1) 도시경제 활성화 2) 주거지 환경재생 3) 상업지 환경재생 4) 공동체 활성화

2) 주거지 환경재생: 공원(쌈지공원, 어린이공원 등), 담장 정비, 보행로 정비, 집수리 등 물리적 주거환경 재생

출처: 국토교통부(2014),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pp.9-12.

- (목표달성 방안) 도시재생 세부전략의 예시인 주거지 환경재생,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의 전략 가운데 일부 공간복지시설 사업이 포함될 수 있고, 이러한 전략은 권역별 실현 방향으로 '도시재생기본구상'에 반영됨

기초생활인프라 등을 적정수준으로 공급'하는 것을 도시재생의 목표로 명시하며, 중점 시책으로 '도서관, 공원, 놀이터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을 설정한 후 이를 단계적으로 확충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마을시설 11종과 지역거점시설 7종의 최저기준을 제시한다(별표 2).

- 17) 필수조사 항목은 활성화지역 지정을 위한 법적 기준에 해당하는 인구감소, 사업체감소, 노후주택 증가(도시재생법 13조 4항 및 영 17조)

- (활성화지역의 지정 및 유형구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기준 예시로 ‘지역여건 개선요구가 발생한 지역(주거환경 관련 민원 과다발생 지역,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 인 불량한 지역)’ 등의 항목이 포함되며, 활성화지역 성격에 따라 ‘①도시경제기반형’ 과 ‘②근린재생형’으로 구분하여 도시재생 방향을 제시하도록 함
- (도시재생기반시설 정비) 도시재생법 2조에서 정하는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정비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되, 기본구상 성격상 시설 위치를 확정하지 않고 개념적 수준에서 표현하도록 함. 또한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별 표2)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현황조사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제3장. 세부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 제9절. 도시재생기반시설 정비 등에 관한 계획

3-9-1.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0호 및 영 제3조에 따른 시설로서 도시전체 또는 일부지역에 위치하는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3-9-2. 전략계획에서는 도시재생기반시설이 설치되는 위치 등은 계획의 유연성을 위해 점선이나 개념선 등을 통해 계획한다.

- 도시재생기반시설: 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②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이용시설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도서관, 공동작업장, 어린이집· 경로당, 마을방송국· 마을신문사 등)
- 기초생활인프라: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도시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3-9-3.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서 제시된 기초생활인프라의 최저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 (이하 ‘기초생활인프라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노력해야 한다.

3-9-4. 도시재생기반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설치토록 한다.

3-9-5.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이용시설은 현황조사 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시설마련을 위해 여러 시설들이 함께 있는 주민복합지원시설의 형태로 건립할 수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2014),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pp.29-30.

[표 10]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과 공간복지시설 연관성

부 문	내 용	공간복지시설과 직접적 연관
2.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의 내용과 방법	① 기초조사의 목적	
	② 조사내용	○
	③ 조사방법 및 관리	
3. 세부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① 계획의 목표 및 범위	
	② 쇠퇴진단 및 여건분석	○
	③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	○
	④ 활성화지역의 지정 및 유형구분	△
	⑤ 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 및 연계방안	
	⑥ 추진체계 운영 및 구성방안	
	⑦ 재원조달방안	
	⑧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방안	
	⑨ 도시재생기반시설 정비 등에 관한 계획	○
	⑩ 활성화계획의 성과관리 방법 및 기준	

출처: 국토교통부(2014),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2-3장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도시재생전략계획과 공간복지계획의 정합 방향 검토

- (계획의 성격)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본구상 성격의 전략계획으로 공간복지시설 등 물리적 계획요소에 대한 상세한 계획은 부재함
- (조사항목 선정의 임의성) 기초조사항목의 예시가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으나, 활성화 지역 지정요건 외에는 선택적 항목으로 전체 지역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어렵고, 도시 간, 도시 내 환경 격차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기준 지표가 없음
- (시설계획의 추상성) 도시재생기반시설 정비 및 기초생활인프라 최저 수준 확보 고려를 원칙으로 하나 위치를 확정하지 않는 구상 수준에서 시설계획을 수립하며, 기초조사시 시설현황이 선택사항이므로 상세한 조사결과에 기반하여 계획을 수립하기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음
- (생활권별 전략의 한계) 전략계획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도시재생기본구상에서의 생활권의 공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도시·군기본계획상의 생활권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은 주민 생활에 밀착된 일상생활권 단위의 조사와 계획에 한계가 예상됨

- (운영상 문제점) 지자체가 부처사업 공모 일정에 따라 단기간 내 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활성화계획과 동시에 수립하는 경우, 지역의 여건 및 수요를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우며 전략계획의 적합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¹⁸⁾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하위계획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해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
 -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으로 구분(「도시재생법」 제2조제6항)
 - 도시전략계획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고,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평가지표·평가방법 등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도시재생법 시행령」 제16조)
 - 물리적 환경과 다양한 분야를 연계하는 융·복합 계획, 구체적인 내용으로 시행주체 발굴을 병행하는 실천계획,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양방향 계획수립, 주민참여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개요》

(수립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목표년도) 수립 시점으로부터 최소 5년 이상 경과한 시점

(공간범위)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계획내용) 1. 활성화지역의 일반현황 2. 도시재생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3. 지역현황진단

4. 목표·전략의 수립 및 단위사업 시행 계획 확정 5. 활성화계획의 추진 실적 평가

출처: 도시재생법(법률 제 17171호) 및 도시재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012호)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지역현황 진단, 단위사업 시행계획 수립 단계에서 물리적 환경을 직접적으로 다룸
 - (현황 진단) 대상지의 쇠퇴원인 분석, 잠재력 진단 단계에서 기반시설 현황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며, 진단 지표의 예시로 도시계획 현황(용도지역·지구, 토지이용, 교통·복지·교육·문화 기능 및 시설, 기타 기반시설 현황 등)을 제시

18)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통한 활성화지역 지정이 도시재생법에 의한 사업 수행 및 국비 지원의 필수 요건이므로 국토교통부 사업공모시점에서 무리하게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음

- (단위사업 도출 및 시행계획 수립) 단위사업으로 지역 유희자원을 활용하여 문화·돌봄·복지시설 설치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며, 도시재생기반시설을 설치·정비할 때의 고려사항으로 시설요건(적정규모 및 용도, 사업비)과 관리문제(운영주체 등) 제시

제4장. 활성화 계획의 수립 | 제5절. 단위사업의 시행계획

- 4-5-1. (단위사업의 발굴 및 시행계획 수립) ⑧ 단위사업을 발굴할 때에는 노후 취수장, 폐교, 폐철도역, 빈집, 장기 방치 건축물, 유희 부지 등을 활용하여 대중이 이용가능한 문화·돌봄·복지시설 등의 설치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검토하여야 한다.
- 4-5-3. (단위사업의 주요 내용) 일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 공동체의 회복, 생활환경 개선, 지역문화 활성화, 근린단위 소득창출 사업 등과 관련된 단위사업을 주로 발굴하여야 한다.
- 4-5-7.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 ①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를 추진하는 경우 단위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한다.
- ② 도시재생기반시설은 수요와 입지 조건, 사업시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국공유지나 공공건축물 등을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 ③ 도시재생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도시재생기반시설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주체, 사업비, 규모 및 용도, 전체 활성화계획 및 단위사업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검토해야 하며, 준공 후 운영 주체와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출처: 국토교통부(2014),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제4장 제5절.

[표 1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내용과 공간복지시설 연관성

부 문	내 용	공간복지시설과 직접적 연관
3. 지역 현황 진단	① 대상지역의 쇠퇴 양상 및 원인 진단	○
	② 대상지역 내 자원 조사 및 잠재력 분석	
	③ 대상지역 내 각종 도시재생 및 지역개발 관련 계획 및 사업 조사	
	④ 대상지역 내 활동 중인 주민 조직·시민단체 등 현황 조사	
4. 목표·전략의 수립 및 단위사업 시행 계획 확정	① 활성화계획의 목표 및 성과지표	○
	②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콘텐츠의 발굴	
	③ 핵심 콘텐츠를 토대로 단위사업 도출 및 시행계획 수립	
	④ 단위사업별 시행주체 발굴 및 참여를 위한 계획	
	⑤ 공공 및 민간 자원 조달 계획 및 예산 집행 계획	
	⑥ 사후 운영 관리 주체 및 방안	

출처: 국토교통부(2014), 근린재생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제4장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공간복지계획의 정합 방향 검토

- (전략계획과의 관계) 전략계획을 통해 활성화지역이 지정되고 활성화계획의 목표와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활성화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공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발굴됨
- (사업실현의 한계) 실현가능성을 전제로 대상지의 다양한 계획을 연계하지만, 사업부서가 다를 경우 실제 사업에서 이를 조율할 주체가 없음
- (계획의 평가) 활성화계획의 목표와 성과지표, 단위사업 시행에 있어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있으나, 단위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이 부재하여 계획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어려움
- (시설사업 추진의 한계)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에 대한 계획으로, 대상지에 거주하는 주민·상인과 협력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활성화지역 지정부터 사업시행까지의 기간이 짧아 대상지 여건과 시설사업의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기 어려움
- (시설 공급의 타당성 검토) 단위사업 중 도시재생기반시설 계획시 수요와 입지 조건, 사업시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수요와 입지적정성을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이나 자료 부재
- (성과 평가의 한계)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부재

3. 커뮤니티 계획 사례

■ (미국) 페리아시 커뮤니티 서비스 기본계획(2014)¹⁹⁾

- 계획의 개요 및 특징
 - 시설 효율성, 생산성, 서비스 비용 및 수익 생산의 원칙을 통해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시의 공간복지 기본계획
 - 공원, 여가시설, 오픈스페이스, 산책로, 스포츠시설, 공공 문화시설, 도서관 등에 대한 실행 전략 계획으로 2014년 시장 및 시의회에서 승인
 - 인구가 성장중인 페리아시 시민들의 공간복지 수요와 시설 트렌드를 반영
 - 기존 시설에 대한 평가, 각종 계획 및 공공데이터 등의 자료 수집, 정밀 분석을 실시하여 기존 서비스의 수준을 파악하고, 신규 공급 등의 전략에 대한 정책추진 우선순위를 제안
 - 커뮤니티 전수조사, 공원·여가시설 위원회 회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청년위원회 운영(Youth group session), 관련 공무원 인터뷰, 이해관계자 인터뷰 등 진행
 - ① 지역사회 조사, ② 시설 트렌드 분석, ③ 여가시설 및 도서관 프로그램 분석, ④ 사례조사, ⑤ 시설 목록 및 여건 분석, ⑥ 서비스 수준(LOS) 분석, ⑦ 자원 및 재정 분석, ⑧ 서비스, 유지관리 운영 분석, ⑨ 정책 제안 및 실행 우선순위 계획으로 구성
- 관련계획
 - Peoria 지역의 공원, 여가, 오픈스페이스, 산책로 마스터플랜과 도시계획, 청소년 계획, 사막 등 보존계획, 특정지역계획 등과 관련된 22개의 관련 계획 - ‘City of

19) City of Peoria, Arizona. (2014). Community Services Master Plan-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Parks, Recreation, Open Space, Trails, Sports Facilities, Public Art and Libraries. Final Report | Approved by Mayor and City Council - August 27, 2014. 보고서 내용을 기반으로 추가 조사 및 요약 정리.

Peoria Parks, Recreation, Open Spaces, and Trails Master Plan Update, 2006', 'City of Peoria 2011 General Plan', 'Desert Lands Conservation Plan and Ordinance (DLCO), 2005', 'CAP Trail Feasibility Study, 2004', 'Lake Pleasant Regional Park Master Plan, 1995' 등 -을 검토

- 현재 및 과거 계획 목표와 전략의 일치, 보완여부, 관련 시설 정보 수집 등을 위해 관련 계획을 모두 검토하고 통합적인 커뮤니티 서비스 계획을 제시

페리아시의 인구 및 커뮤니티 특성

- 1880년대 애리조나 운하 완공에 기반하여 피닉스 지역의 북서쪽에 조성된 사막지역으로 애리조나주에서 6번째로 큰 도시
- 스포츠 전지훈련 장소, 전국적인 문화시설, 애리조나주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 등 여가 및 문화 서비스 기회에 대한 접근성이 높음
- 현재 약 158,135명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연방이나 애리조나주보다 약간 높은 수치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커뮤니티 시설 수요 증가가 예상됨
- 인구수, 연령, 가구원수, 가구소득, 인종, 건강 관련요인 등을 조사함
- 지역 전체가 아닌 새롭게 개발되는 도시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고, 청년가구가 감소하고 있으나 타 지역보다는 그 비율이 높으며, 고령층의 인구증가 비중이 높은 편

출처 : City of Peoria, Arizona. (2014). Community Services Master Plan, pp.73~82.

- 커뮤니티 및 이해관계자 참여와 커뮤니티 설문조사
 - 공원·여가시설 위원회(Peoria Parks and Recreation Board), 커뮤니티 서비스 부서(Community Services Department), 청년층, 공개회의 및 포커스 그룹과 수차례의 인터뷰 및 회의 등을 진행하여 서비스 운영 및 품질 등에 대한 요구 및 우선순위 등에 관한 의견 수렴
 - 우편, 전화, 온라인을 활용한 커뮤니티 전수조사를 통해 공원과 여가시설에 대한 주민 인식, 요구사항, 지불용의 등을 조사함(4,000가구 무작위 표본, 811개 설문조사 회수)
- 공원, 여가시설, 도서관 트렌드 분석

- 여가공간과 도서관 관련: 과학기술(디지털기기 활용, 웹사이트, 소셜네트워킹),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웹사이트 홍보 등)
- 인구통계 기반의 참여 및 트렌드: 비만률 및 신체활동을 고려한 여가시설 기반 활동(연령별, 신체적/정신적 어려움), 도서관 이용활동(연령별)
- 여가시간 단축 여건과 새로운 활동으로 연계되는 활동 기반 트렌드: 문화활동, 익스트림스포츠, 이벤트 및 축제, 여행
- 공원과 여가시설 트렌드: 모든 연령대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시설 지향
- 도서관 트렌드: 지속가능성, 건물접근성 향상 등에 대한 요구 검토
- 여가시설 및 도서관 프로그램 분석
 - 커뮤니티 서비스 부서가 제공하는 여가 프로그램 및 물리적 공간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여가시설 프로그램: 학교 기반 프로그램, 미취학 아동 프로그램, 청소년 관심사, 스포츠 및 피트니스, 10대 관심사, 성인 관심사, 장년층 프로그램, 적응형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수상스포츠, 커뮤니티 및 이벤트, 프로그램 비용 평가 정책에 관한 사항 조사
 - 도서관 프로그램: 청소년 및 성인프로그램, '퍼리아 공공도서관 친구들(Friends of the Peoria Public Library)'에 관한 사항 조사
 - 관련 자료수집 및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 수요 증가에 따른 물리적 공간 확보 필요성을 검토
- 벤치마킹 분석(사례조사)
 - 인구, 공원 등 관련 시설 규모, 운영직원, 총 운영비 및 예산, 비용회수, 인구당 특정 공원 및 여가시설의 유형과 수 등이 유사한 사례의 분석을 통해 서비스, 시설, 프로그램 제공방식을 살펴보고, 운영 과정의 경과에 따른 개선사항 등을 사전에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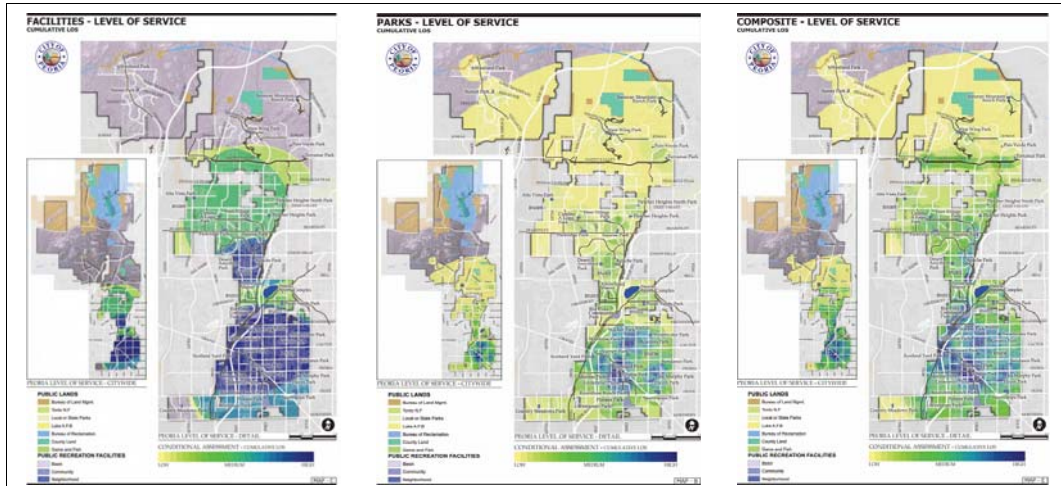
- 조사대상 (7개 도시 및 담당 부서): City of Chandler, AZ Community Services Department / Fort Collins, CO Parks Department / City of Lakewood, CO Community Services Department / City of Mesa Parks, Recreation and Commercial Facilities / City of Santa Clarita, CA Parks, Recreation and Community Services Department / City of Scottsdale, AZ Community Services Division - Parks and Recreation Department / City of Westminster, CO Parks, Recreation and Libraries Department
- 조사 연도의 예산, 지출, 인력,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Peoria와 비교하여 분석
- 시설목록 및 여건 분석
 - 기존 GIS 수집 및 평가, 현장조사 및 정량적/정성적 평가, GIS 및 현장조사 평가를 통해 근린환경 공원, 커뮤니티 공원, 지역 공원, 특정 용도 공원, 산책로, 오픈스페이스, 분지를 평가분석
 - 현장조사 평가는 표를 기반으로 다음 4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진행됨

[표 12] Primary and Support Asset Rating Scale (p.90)

등급	내용
5	커뮤니티의 요구를 평균 이상으로 충족하며 품질과 조건이 매우 우수. 추가적인 개선은 필요하지 않으나 서비스 수준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유지보수 필요
4	평균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품질과 조건이 우수한 자산
3	커뮤니티의 요구를 적절히 충족하고 평균 품질과 조건을 갖춘 자산으로 개선 또는 추가 수량 확보가 필요할 수 있음
2	커뮤니티 요구 충족에는 불충분하며, 평균 이하의 품질과 조건을 가진 자산으로 개선이 필요함
1	커뮤니티의 요구 충족과 품질 및 조건 측면에서 모두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자산이며, 수량 추가나 개선이 필요함
0	품질과 조건이 위험하기 때문에 커뮤니티 요구 충족에 있어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자산으로 제거 또는 교체가 필요함. 사용자를 위한 시설 추가가 필요함
x	자산이 없거나 시설에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부 지원 자산에 대해 평가 순위 대신 X로 표시

출처 : City of Peoria, Arizona. (2014). Community Services Master Plan, p.90.

- ① 기존 자산에 대한 지원 자산의 필요성
- ② 규모와 용량을 고려한 지원 자산의 수
- ③ 공공 이용의 편리성을 고려한 시설 내 배치
- ④ 수리 및 교체 등을 고려한 기능적 측면
- 서비스 수준(Level of Service, LOS) 및 맵핑 분석
 - 커뮤니티 변화에 따라 진화하는 ‘가치 기반’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 시설 위치, 서비스 조건, 평가점수 등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커뮤니티 제공 서비스 수준을 측정
 - 기존 LOS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준과 현재 서비스 수준을 조사하여 인구 대비 공원 규모 등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비교하여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추가적인 시설 계획을 수립
 - 1980년대 개발 및 1995년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된 ‘LOS 가이드라인’은 공원 및 주요 편의시설에 대한 최소기준을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공원의 분류와 권장 서비스 수준 등에 관한 템플릿을 제공
 - 근린환경, 커뮤니티, 지역, 특정용도 목적으로 분류한 현재의 공원 목록을 작성하고, 규모, 역할, 제공 프로그램/시설 등을 조사
 - 항공 정보와 조사구역, 각 시설 위치 등의 데이터를 수집한 GIS 맵핑과 공간분석을 통해서 주민에게 제공되는 시설의 양과 분배, 서비스 격차에 따른 편의시설의 질 등을 분석
 - 분석자료를 기반으로 공원 시스템 간의 관계, 개선 및 유지관리 분석, 관련 데이터 기반 결정을 할 수 있음



[그림 11] 페리아시의 시설 수준분석도

출처: City of Peoria, Arizona. (2014). Community Services Master Plan, pp.109~117.

- 자원 및 재원 계획

- 시 전반의 예산 채택 과정, 재원출처, 일반 재무전망 등 재원 및 예산집행계획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사
- 시 전체 예산과 커뮤니티시설부서의 예산의 연도별 증감률, 재원출처, 자본 개선 기금, 비용회수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시설 지원을 위한 자금 마련 방안과 필요성 등을 정리
- 커뮤니티시설이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혜택에 대한 가치를 강조하고, 서비스 및 시설 지원 투자 및 운영 비용 증가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계획의 필요성을 앞에서 분석한 자료(LOS 등)를 바탕으로 설명

- 서비스, 관리 및 운영 분석

- 커뮤니티 시설을 관리하는 커뮤니티서비스 부서의 조직구조와 인력 구성, 담당 업무 등에 대한 현황조사
- 공원 부서, 여가 부서, 스포츠시설 부서, 도서관 서비스 부서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강점과 개선과제를 분석

- 해당 업무 외 수행하는 일반적인 사항, 마케팅 및 이벤트 조정, 기술, 인력, 공원 및 여가 위원회, 파트너십 등에 관한 부문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업무과다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 제시
- 운영 및 유지관리 분석
 - 공원과 스포츠시설에 관한 유지관리는 커뮤니티서비스 부서 내 2개의 독립된 부서에서 담당하며, 이 섹션에서는 유지관리에 초점을 맞춤
 - 공원 부서와 스포츠시설 부서의 담당직원 역할과 업무, 트레이닝에 관한 사항, 업무 책임, 시설 관리를 위한 직원의 비율, 재원과 예산 내역을 검토하고,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 상세분석 수행 방안 제시
 - 조직 분석을 통해 내부 운영 및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 권장사항 및 우선순위 실행계획
 - 커뮤니티서비스 부서의 관리 시설 및 프로그램 분석을 근거로 계획의 권장사항을 도출하고, 지역사회 조사, 서비스 수준 분석, 공간 분석 등을 통해 지역사회 요구에 맞는 우선순위를 설정함
 - 커뮤니티서비스 부서의 정비, 커뮤니티서비스 개선을 위한 투자,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 개선과 개발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요구에 맞는 전략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커뮤니티서비스 권장사항의 중점 영역은 공원과 시설 개발 및 개선방안,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 파트너십 및 협업, 부서조직 및 인력, 재원 조달 측면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향후 10년(3-4년 단위의 단기, 중기, 장기 기간으로 분류) 동안 달성 가능한 목표 설정 및 우선순위 실행 계획 및 전략을 제시하며, 관련 직원의 지침(living document)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공

[표 13] 권장사항 및 우선순위 실행계획

<p>공원과 시설 개발 및 개선방안</p>	<p>목표 1. 시설 개선과 리노베이션을 통한 Peoria의 증가하는 커뮤니티 요구 충족</p> <p>1.1 기존 개선 개선을 통한 시스템 전체의 서비스 수준 향상</p> <p>1.2 비용절감, 건강, 효율성을 위한 시설의 유지보수, 개선, 업그레이드 및 설계에 대한 지속 가능한 실행 시행</p> <p>목표 2. 시설 개발을 통한 Peoria의 증가하는 커뮤니티 요구 충족</p> <p>2.1 기존 공원, 여가시설, 도서관 시스템을 보완하는 새로운 시설 개발</p> <p>2.2 새로운 산책로 개발, 산책로와 지역 편의시설의 연결을 통한 산책로 네트워크 확장</p> <p>2.3 다양한 방법을 통한 시설 접근성 개선</p>
<p>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p>	<p>목표 3. Peoria 커뮤니티의 다양한 요구 충족을 위한 건강과 웰빙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p> <p>3.1 여가 및 스포츠 프로그램 유지 및 확대</p> <p>3.2 도서관 프로그램 유지 및 확대</p> <p>3.3 노출과 참여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공 서비스 홍보</p>
<p>파트너십 및 협업</p>	<p>목표 4. 커뮤니티 내 여가시설 및 활동을 위한 가용자원을 극대화하는 파트너십 강화 및 개발</p> <p>4.1 Peoria 전체에 대한 기회 확대를 위하여 자원을 최대화하는 대체 제공자, 파트너, 인접 관할권과의 협력 유지 및 육성</p>
<p>부서조직 및 인력</p>	<p>목표 5. 공공에 대한 부서 서비스의 유지관리 및 개선과 지역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부서 역량의 증가</p> <p>5.1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직 및 관리 절차의 개선</p> <p>5.2 부서와 모든 직원 간의 조정 개선을 통한 일상업무 개선 및 공공에게 미치는 서비스 영향 방지</p> <p>5.3 서비스 확대를 위한 부서 역량 강화</p> <p>5.4 시스템 내 모든 시설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할 수 있는 도구의 직원 제공</p> <p>5.5 공공서비스 극대화와 부서운영의 재정적 안정성 제공을 위한 재정 기반의 정책과 비용 구조 평가</p>
<p>재원 조달</p>	<p>목표 6.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 확보와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시설의 성장 시스템 계획</p> <p>6.1 단기 및 장기적인 예산 목표를 위한 시설 및 자원 관리 방법의 개선</p> <p>목표 7. 잠재적인 재원 출처 파악</p> <p>7.1 A.R.S. §9-463.05.를 준수하면서 잠재적인 재원 출처 조사</p>

출처 : City of Peoria, Arizona. (2014). Community Services Master Plan, pp.168~169. 요약 정리

■ (캐나다) 토론토 공원·여가시설 기본계획²⁰⁾

• 계획의 개요 및 특징

- 변화하는 토론토시의 공간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설을 리뉴얼하고 신축하기 위한 20년 장기계획
- 2004년 공원 및 여가시설 전략계획(15년단위)을 채택 후 여가시설보고서(5~10년단위)를 통해 시의 여가시설 공급과 계획 방향의 틀을 제시
- 공원계획(2013) 수립 후, 기본계획은 2017년 승인, 실행 전략은 2019년 개정, 승인
- ‘여가서비스계획(The Recreation Service Plan, 2013-2017)’, ‘공원 계획(The Parks Plan, 2013-2017)’, ‘Our Common Grounds (2004)’, ‘여가시설보고서(The Recreation Facilities Report, 2004)’ 등의 관련 계획 및 보고서를 기반으로 방향설정
- 변화하는 도시 대응, 진화하는 요구에 맞는 시설 재편, 양질의 시설제공, 요구충족을 위한 협업, 모든 사람을 위한 접근성 향상, 재정적 문제 해결의 6가지 주요 과제 도출을 통한 계획 수립
- ① 비전과 목표 설정, ② 시설별 공급전략, ③ 기존 시설에 대한 지속가능한 투자 전략, ④ 정책 제안, ⑤ 재정계획 등을 구체화
- 1500개 공원, 136개 커뮤니티센터, 40개 경기장, 52개 옥외 아이스링크, 65개 실내 / 57개 수영장에 대한 기존 시설 공급의 격차 해결 및 시설요구 대응 계획

• 비전과 목표

- 비전: 참여 유도 및 주민 요구 충족, 지역사회 강화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원 및 여가시설

20) City of Toronto. (2017). City of Toronto Parks and Recreation Facilities Master Plan 2019-2038.를 참고로 추가 조사 및 요약정리.

- 원칙: 품질, 혁신, 지속가능성, 형평성을 바탕으로 한 시설 제공
- 목표: 기존 시설 개선, 견차 및 성장 관련 요구사항 해결, 협력 및 새로운 기회 모색
- 시설 제공 전략
 - 각 시설 유형에 따라 위치, 상태, 규모, 수준, 활용 등을 조사하였으며, 이해관계자의 협의, 프로그램 수요, 레크리에이션 참여 경향, 사회인구학적 동향, 다른 지역 사례를 바탕으로 목표를 정하고, 시설격차와 미래 성장 분야, 다른 시설 및 서비스 제공자 가용성, 보완 전략 및 계획 연계 등의 사항을 파악하여 전략 제시
 - 시설 유형에 따라 공급현황과 공급비율, 목표, 신규 및 교체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제시하고(표 1), 상세한 전략 등을 유형별로 작성

[표 14] 추천시설 요약 (20년 실행계획)

Facility Type	Current Supply (City)	Current Per Capita Provision Rate*	Recommended Provision Target (based on future growth)	Facilities Identified in 2017-2026 Capital Plan	Additional FMP-Recommended Facilities	Total Additional Facilities (next 20 years)	Replacement Facilities (next 20 years) - Estimated
Community Recreation Centres (Large and Mid-size)	85**	1,34,000	1,34,000 and 2km to 2.5km radius	14***	3	17	11
Gymnasiums	102	1,28,000	All new and replaced CRCs; 2km radius	16***	7	23	8
Indoor Pools (locations)	59	1,48,600	Site-specific; 2km radius	13***	5	18	7
Outdoor Pools (locations)	59	1,48,600	No additional recommended	0	0	0	6
Splash Pads	119	1,24,000	1,24,000 and 2km radius	7	13	20	0
Wading Pools	101	1,28,400	No additional recommended	0	0	0	Nd
Arenas (pads)	65 (at 51 locations)	1,44,100	1,50,000 (existing and future pop.)	1	0	1	4
Curling Rinks (sheets)	22 (at 13 locations)	1,131,000	No additional recommended	0	0	0	0
Outdoor Artificial Ice Rinks (pads)	62 (at 52 locations)	1,48,300	1,100,000 and 2km radius	0	5	5 (and 2 or more skating trails)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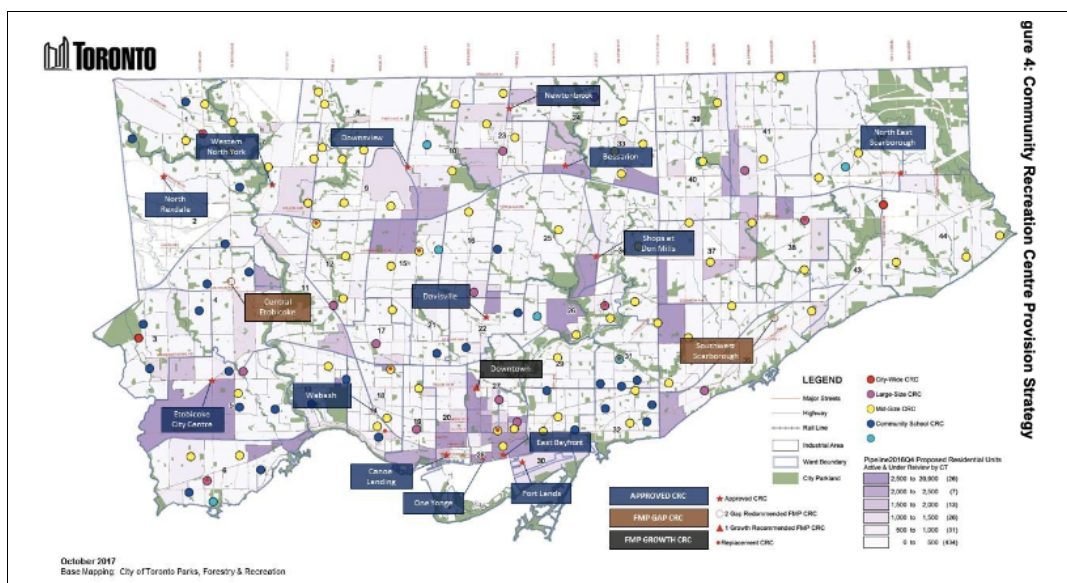
Facility Type	Current Supply (City)	Current Per Capita Provision Rate*	Recommended Provision Target (based on future growth)	Facilities Identified in 2017-2026 Capital Plan	Additional FMP-Recommended Facilities	Total Additional Facilities (next 20 years)	Replacement Facilities (next 20 years) - Estimated
Soccer and Multi-use Sports Fields	324	1,8,900	1,10,000	0	45, plus upgrades	45	0
Ball Diamonds	342	1,8,400	No additional recommended	0	Upgrades only	0	0
Cricket Pitches	28	1,102,500	1,100,000	0	5, plus upgrades	5	0
Tennis & Pickleball Courts	802 (at 185 locations)	1,4,800	2km radius	0	20 (10 pickleball conversions)	20	Nd
Basketball Courts	135 (at 104 locations)	1,21,200	1,15,000 and 2km radius	2	30, plus upgrades	32	Nd
Base Courts (outdoor)	131 (at 90 locations)	1,21,900	No additional recommended	0	0	0	0
Lawn Bowling Greens	28 (at 17 locations)	1,102,500	No additional recommended	0	0	0	0
Skateparks (outdoor)	14	1,205,000	Parks: 1,100,000 and 5km radius; Sports: 1,25,000	2	4, plus 18 skate spots	6	6
Bike Parks	4	1,717,000	Additional study required	0	1, plus local-level amenities	1	0
Dog Off-leash Areas	68	1,42,200	Site-specific, as per City policy	3	Site-specific evaluation	As needed	0
Sports Bubbles	9	1,319,000	Site-specific	0	Project specific evaluation	3	0
Clubhouses and Fieldhouses	118	1,24,300	Site-specific	1	As needed	As needed	Nd

* Based on a 2016 population estimate of approximately 2.87 million persons. Rates are rounded.
 ** In addition, the City operates 2 City-wide centres, 29 community centres and 7 community recreation spaces for a total of 123 community recreation centres.
 *** Includes 3 community recreation centres (and pools and/or game) recommended in the 2016 RFP and 2 proposed in unadopted secondary plans. Additional indoor facilities may be realized through community recreation centre replacement projects, based on demonstrated needs.

출처 : City of Toronto. (2017), pp.21~22.

- 커뮤니티 레크리에이션 센터(CRC)
 - 지역의 대표적인 공공여가시스템의 중추공간으로 커뮤니티 참여, 사회적 관계, 건강 및 신체활동 촉진 등을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 제공
 - 시가 운영하는 시설 외에 지역사회 조직, 비영리 단체, 학교 등이 운영하는 시설이 서로 네트워크를 만들고 주민 및 지역사회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

- 시가 소유한 123개 CRC 중에서 대규모 다목적 및 중규모 시설을 중심으로 계획 수립
- 다양한 인구구성에 따른 기존 시설의 활성화 및 새로운 시설 조성이 필요하며, 계획 예정 시설 및 위치에 대한 간략한 개요도 제시
- 현재 주민수 대비 제공되는 시설 수, 규모 및 위치 등을 파악하고, 개선 또는 활성화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기준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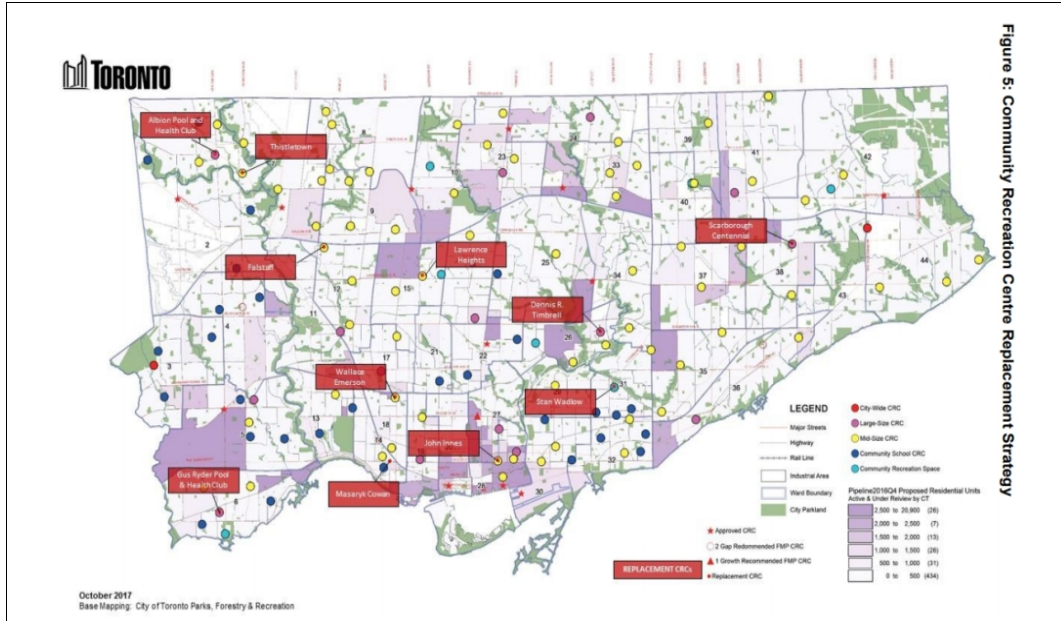
[그림 12] 토론토시의 커뮤니티센터 공급 전략

출처: City of Toronto Parks and Recreation Facilities Master Plan 2019-2038, p.26.

- 기존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공공투자
 - 시설의 물리적 상태 악화는 이용자의 건강 및 안전 문제 증가와 시의 자산악화 및 그에 따른 운영효율성 저하 등을 유발함에 따라 기존 시설 관리의 필요성 강조
 - 시설의 노후화와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감소, 시간 경과에 따른 부적절한 투자, 양호한 기존시설 개선을 위한 재고현황파악(State of Good Repair, SOGR), 유지관리 지연에 따른 비용 및 위험 증가,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지관리, 유지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 등의 문제를 검토

- 전략적인 기반시설 재원이 필요하며 기존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우선



[그림 13] 토론토시의 커뮤니티센터 재배치 및 활성화 전략

출처: City of Toronto Parks and Recreation Facilities Master Plan 2019–2038, p.28.

- 정책제안사항
 - 계획의 비전, 원칙, 목표, 전략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며,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5년 주기 계획 수립
 -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사업 정보를 활용을 위한 사업근거 기반 시설 평가와 가이드라인을 개발
 - 주요 프로젝트 계획시에는 커뮤니티 참여, 시설 프로그램과 서비스 요구사항을 검증하는 사업계획(인구통계학적 및 사회경제적 데이터, 지역적 요구 등), 잠재적인 파트너십을 고려

- 주민, 이해관계자, 공무원의 참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경제/사회/문화/환경적 측면에서 공원 및 여가시설이 미칠 수 있는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
- 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소통 및 협업을 통해 도시 내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실행사항 등 조정
- 관련 지침을 정기적인 검토하면서 환경적인 측면(기후변화, 에너지 절약 등)을 고려한 정책 및 기준 등을 포함
- 장애인 접근성, 연령 친화 등을 고려한 시설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시설 정보의 문서화 및 공개
- 시대 변화와 다양한 요구에 맞는 공간 조성 및 전환을 유도하고, 접근성과 운영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 평가
- 재정계획
 - 10년간의 자본계획과 재원조달방안(채무비용, 개발부담금, 보조금, 개발인센티브 등) 등 시설계획을 위한 재무환경 분석, 사업 시기 등을 고려한 비용 추정, 자금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
 - 재무전략을 위한 6가지 원칙 제시: 개발 관련 자금 극대화, 비성장 분야에 대한 토지 및 자금 최적화 등의 다양한 접근방식, 전략적인 재원 조달, 양호한 시설 상태의 최적화, 투자결정에 따른 혁신과 현대화,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하며 투명한 투자결정
- 계획실행 및 모니터링
 - 시설계획은 시의 연간 예산 자료, 개발비용 보고서, 2차 계획 및 관련 연구 개발을 위해 활용되며, 이와 함께 법적사항, 서비스 기준, 커뮤니티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예산과 프로젝트 등 관련 사항을 결정하는데 활용
 - 점수표(Scorecard): 투자수준, 시설활용도 및 사용자 만족도 등에 대한 연간 성과 측정을 통해 목표 달성 확인과 개선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검토

[표 15] 시설기본계획 평가 지표

분류	측정
투자자산	1. 자본 투자: 시설계획에 명시된 개발일정에 따라 실행된 사업 비율(%) 2. SOGR 투자: SOGR 요구의 비율(%)로 나타나는 SOGR에 대한 연간투자 3. 창의적 투자: 기존과 다른 출처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총 사업 비율(%) 4. 사회 투자: 프로그램에 접근하기 위한 운영비용으로 나타나는 연간 commitment
활용성	5. 시설 활용: SOGR 투자를 받은 시설의 트랙픽 증가에 초점을 맞춘 연간 시설 트랙픽(또는 등록건수, 임시활용 등) 6. 프로그램 활용: 용량의 비율(%)로 나타나는 프로그램 참여
효율성	7. 점유 비용: 운영시간당 비용으로 나타나는 기본 시설 운영 비용(프로그램 제공 비용 제외) 8. 방문 비용: 시설사용자당 비용으로 표시되는 기본 시설 운영 비용(프로그램 제공 비용 제외) 9. 상쇄 비용: 지자체 관리 비용 계획의 비율(%)로 표시되는 창의적인 운영 관계(커뮤니티 위원회, 파트너십 등)에 따른 회피비용
실효성	10. 내부 Net Promoter Score: PFR 시설의 직원 등급 11. 외부 Net Promoter Score: PFR 시설의 일반 대중 등급

출처 : City of Toronto. (2017), p.95.

■ (일본) 입지적정화계획

- 계획의 개요
 - 2014년 8월, 도시재생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해 ‘입지적정화계획’을 제도화
 - 인구감소로 인한 공간복지시설 수요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개별 지자체에 대해 3개의 거점(중심/지역/생활)으로 구분 설정하고 거점간 대중교통으로 연결
 - 도시기능구역 내 거점에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공간복지 서비스와 시설의 입지를 유도, 재편하는 계획
 - 도시재생법에 의한 법정계획이자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정촌 마스터플랜의 일부이지만, 계획 달성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지역 여건에 맞춰 실행계획을 재검토하는 유연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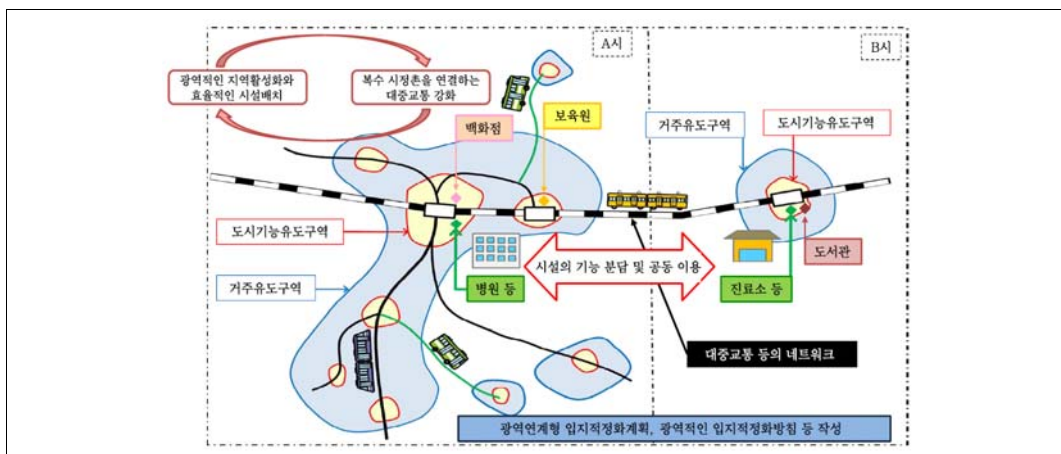
- 407개 도시가 입지적정화계획을 추진중, 161개 도시가 입지적정화계획을 작성·공표(2018년 5월 현재)
- 거점으로서의 원활한 시설입지를 유도하기 위해 재정·금융 및 세제 지원방안 제시
- 계획의 특징
 - 입지적정화 계획은 인구축소 시대에 대비하여 종합적인 시각에서 ❶거주기능, ❷복지, 의료, 상업 등 도시기능의 입지, ❸공공교통을 포괄하는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는 계획
 - 일부 기능이 아닌 거주, 의료, 복지, 상업, 공공교통 등 도시의 모든 부문을 하나의 계획 하에 포괄적으로 관리
 - 다극 네트워크형 압축도시를 지향하며, 구역지정과 구역에 대한 기본적 방침을 설정한 후, 구역지정 의도에 맞춰 계획적으로 도시축소를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
 - (계획의 목적) 마스터플랜에 의해 민간이 도시기능에 투자하거나 신규 거주지를 조성할 때 이 기능들을 계획된 지역으로 유도하여 계획적 축소를 추진하기 위한 토대 마련
 - 도심내의 유흥지, 빈집, 교외부의 신규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지향하는 입지적정화계획의 수립은 시정촌 마스터플랜 수립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²¹⁾
 - (계획 주체) 입지적정화 계획은 주민에게 가장 가깝고 마을만들기의 핵심 담당자인 시정촌이 작성하며 복수의 시정촌에서 광역생활권이나 경제권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되는 복수의 시정촌이 연계하여 입지적정화계획을 작성²²⁾
- 구역 설정
 - 시가화 구역을 축소 조정하는 “거주유도구역”, 거주유도구역 내에 주요 도시기능을

21) 1992년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시정촌의 도시계획에 관한 기본방침”은 기본방침, 시정촌(市町村) 마스터플랜,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도시마스터플랜 등으로 불린다.

22) 도도부현은 광역적 관점에서 각 시정촌의 의견을 배려하며 광역도시계획구역내의 시정촌 사이 계획 상충사항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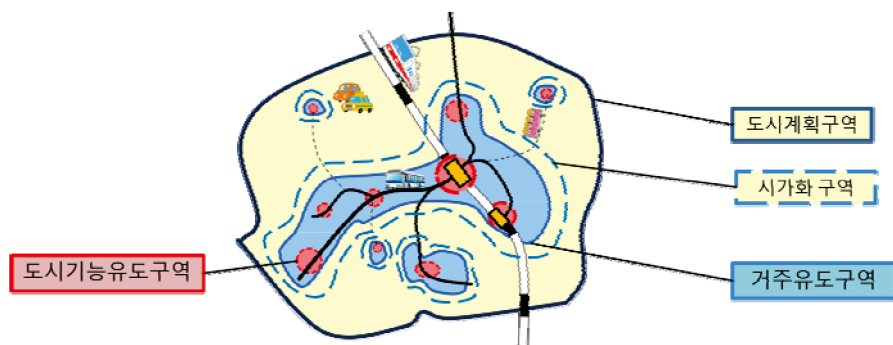
집약시키는 “도시기능유도구역”과 선택사항인 “거주조정지역”, “적지 등 관리구역” 등으로 구성

- 도시기능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도시기능 유도구역을 설정하여 구제를 완화하고 보조금 등의 지급을 통해 도시기능이 집중되도록 유도하는 입지적정화 계획은 강제가 아닌 유도가 제도의 핵심



[그림 14] 입지적정화계획(compact+network) 개념도

출처: 국토교통성(2020), 입지적정화계획 작성 입문 p.24. (https://www.mlit.go.jp/toshi/city_plan/content/001379331.pdf, 접속일: 20.1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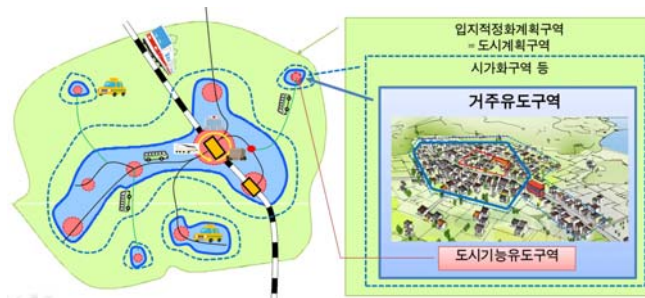
[그림 15] 입지적정화계획 제도 이미지

출처: 국토교통성(2020), 입지적정화계획 작성 입문 p.4. (https://www.mlit.go.jp/toshi/city_plan/content/001379331.pdf, 접속일: 20.12.11.)

[표 16] 입지적정화 계획의 주요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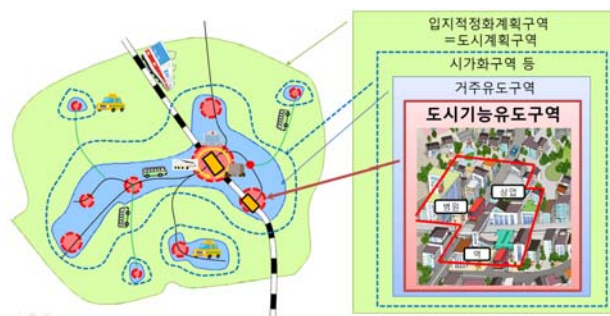
개념	내용
입지적정화계획 구역	· 입지적정화계획구역의 범위 설정은 도시계획구역 전체를 입지적정화계획 구역으로 보는 것이 기본 · 하나의 시정촌내에 복수의 도시계획구역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도시계획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입지적정화계획을 작성 · 단, 토지이용 상황이나 일상생활권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구역 내 일부를 계획구역으로 하거나 주민 등에게 설명 상황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계획구역을 설정하거나 하는 것은 가능
거주유도구역	· 거주유도구역은 인구가 감소하여도 일정 지역의 인구밀도를 유지함으로써 생활 서비스나 커뮤니티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거주를 유도하는 구역
도시기능유도구역	· 도시기능유도구역은 의료·복지·상업 등의 도시기능을 도시 중심거점이나 생활거점으로 유도하여 집약하는 것에 따라 이러한 각종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구역

출처: 국토교통성 (2014), 함께만들자, 컴팩트한 마치즈쿠리, p.3 요약, 성은영 외(2018).p.74 재인용



[그림 16] 거주유도구역의 개념

출처: 국토교통성 홈페이지(<http://www.mlit.go.jp/common/001047114.pdf>)



[그림 17] 도시기능유도구역의 개념

출처: 국토교통성(2015), 개정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 대하여, p.39

• 도시기능유도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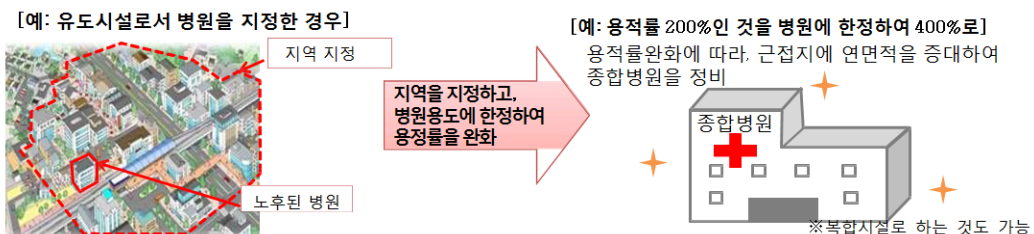
- 도시기능유도구역은 생활 서비스 기능의 계획적 배치를 유도하기 위한 구역으로 주로 의료·복지·상업 등의 주요 도시기능이 도시의 중심거점이나 생활거점에 집적되도록 유도하여 도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도시 기능 충족을 전제한 거주유도구역과 인구밀도 유지에 의한 도시기능유도구역은 함께 설정해야 하며 도시기능유도구역은 거주유도구역 안에 지정함. 다만, 거주유도구역의 경우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과정이 수반되므로, 필요한 경우 도시기능유도구역을 먼저 설정하는 것도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
- 구역의 규모는 도보나 자전거로 용이하게 이동할 수 있는 범위로 지정하며 도시기능유도구역의 설정이 가능한 구역은 철도 역에 가까운 업무, 상업 등이 집적된 지역 등, 도시기능이 어느 정도 충실한 구역, 주변에서 공공교통에 의한 접근 편리성이 높은 구역 등, 도시의 거점이 되어야 할 구역
- 도시기능 유도 구역 내에는 도시기능유도구역별로 병원, 고령자시설, 유치원, 보육원, 초등학교, 도서관, 박물관 등 입지를 유도해야할 도시기능 증진 시설인 “유도시설”을 지정할 수 있음

• 도시기능유도시설

- 도시기능유도시설은 각 도시기능유도구역별로 입지를 유도할 공동복지나 편리성 향상에 현저히 기여하는 시설 (국토교통성, 2015)
- 유도시설의 예로는 고령화 시대에 필요성이 높아지는 병원, 진료소, 노인데이서비스센터, 지역포괄지원센터와 양육세대에게 있어서 거주 장소를 정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되는 유치원이나 보육원, 초등학교 등과 사람을 모이게 해 마을이 북적이게 하는 도서관, 박물관, 슈퍼마켓 및 행정서비스 창구 기능을 가진 시청 출장소 등의 행정시설 등이 있음
- 유도시설이 이미 도시기능유도구역 내에서 충족되고 있는 경우에는 유도시설 설정을

재검토하고, 현재 도시기능유도구역 내에 존재하는 유도시설이 도시기능유도구역 밖으로 이전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필요시 유도시설로 지정하여 도시기능유도구역 외로의 이탈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특정용도유도지구 지정에 의한 적극적 유도시설 유도
 - 도시기능유도지구 내 유도시설과 관련된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도시재생특별조치법 제 109조에 의해 특정용도유도지구로 지정 가능
 - 특정용도유도지구에서는 유도시설의 정비에 대한 재정상의 지원, 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에 의한 금융상의 지원, 세제상의 지원을 제도화하여 보다 활발한 도시기능 유치를 도모
 - 특정용도유도지구 내 유도시설을 포함하는 건축물에 대해 용도제한 용적률과 높이제한에 대한 특례 부여할 수 있음
 - 전체 또는 일부를 유도하고자 하는 용도와 관련된 건축물로 계획할 경우 용적률을 별도 지정할 수 있으며, 유도해야하는 건축물의 특정 용도가 있을 경우 용도지역에 의한 용도제한과 높이제한을 별도로 지정 가능



[그림 18] 특정용도유도지구 지정에 따른 용적률 완화

출처: 국토교통성(2015), p.67, 성은영 외(2015),p.138.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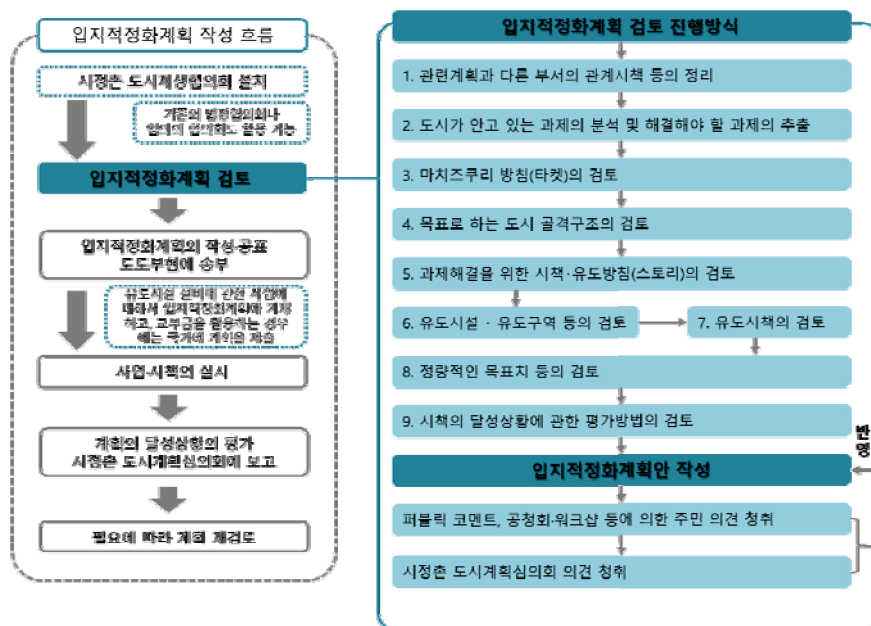
[표 17] 시스이정 도시기능유도시설 설정 예시

시설유형	유도시설	
의료시설	의료소(내과)	(유지)
	의료소(외과) *정형외과 포함	(유지)
	의료소(소아과)	(유지)
	분만을 취급하는 산부인과	[유도]
고령화가 높아지는데 필요성이 높아지는 시설	지역포괄케어 센터	(유지)
육아 지원시설	건강증진시설	[유도]
	인정 보육원	(유지)
문화시설	도서관	(유지)
	정 체육관	[유도]
집회시설	지역교류센터(중앙공민관, 프리미어 시스이 등)	(유지)
상업시설	수퍼마켓(신선식품을 취급하는 1,000m ² 이상의 소매점)	(유지)
	우체국, 간이우체국, 은행 등	(유지)
행정시설	창구기능이 있는 청사(마을 사무소)	(유지)
	창구기능이 있는 청사(보건센터)	(유지)

※ 유도시설 : (유지) 시설이 현존하고 이후에도 구역내에서 입지 유지를 목표로 하는 시설, [유도] 시설이 현시점에서는 없고, 이후 구역내로의 입지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설

출처: 시스이정(2018.04), 시스이정 입지적정화계획, p.8.

(<http://www.town.shisui.chiba.jp/docs/2018030100018/files/keikaku-gaiyo-color.pdf>, 검색일: 20.12.20.)



[그림 19] 입지적정화계획 작성 흐름

출처: 국토교통성(2018), 입지적정화계획 작성 입문. p.8.

- 입지적정화계획 작성방법
 - 입지적정화계획을 작성 시에는 시정촌과 민간 사업자, 주민대표 등의 지역 관계자가 상호관 의견을 활발히 교환하고 서로 연계하여 주체적으로 사업을 추진
 - 계획 작성 후에는 계획의 달성상황을 평가하고 상황에 맞춰 도시계획이나 거주유도 구역을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재검토함으로서 예측이 어려운 다양한 지역의 여건변화에 맞춘 효과적인 마을 만들기를 도모
- 입지적정화계획 달성 평가
 - 시정촌의 입지적정화계획 수립 및 실시 시 목표의 설정이나 설정한 목표의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달성현황을 파악
 - 평가분야는 생활편의성, 건강·복지, 안전·안심, 지역경제, 행정, 에너지·저탄소 등 6개이며 도시 구조를 평가하는 분야로는 생활편의성, 건강·복지, 안전·안심, 지역경제, 행정운영, 에너지 / 저탄소의 6가지
 - 평가지표 중 일부는 현황의 평가 뿐 아니라 장래 예측 평가에도 활용할 수 있다있으며 평가지표별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황의 전국평균치와 도시규모별 평균치를 산정, 제시

IV (가칭)공간복지기본법 제정(안)

1. (가칭)공간복지기본법 제정 방향

■ 제정 이유 및 필요성

-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개인의 행복한 삶의 가치가 중요해지면서 일상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얻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양질의 공간환경이 중요해짐
- 특히, COVID-19 유행 및 장기화 등으로 인해 이동과 접촉 최소화가 요구되면서 의료, 체육, 문화 등의 일상 및 여가활동도 집주변에서 충족하게 되어 근린의 편의 및 복지시설 공급이 더욱 필요해질 전망
- 새로운 위험들로 변화된 뉴노멀시대에는 정든 곳에서 계속 거주하고 누구나 불편이 없는 공간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
 - 주거, 보건,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서비스로서 국민의 삶의 질과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의 중요한 목표이며,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 공간 및 시설 등 자원의 적절한 투입이 필요
 - 특히 복지 공간과 시설의 조성은 주민에게 복지의 기회를 확대하여 거주 가치를 제고하고 이웃간 관계망을 넓혀 삶의 정주성을 강화하므로 그 자체로서 복지, 즉 공간복지의 구현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개인이 향유할 수 있는 일상의 편의와 복지를 위한 시설과 서비스의 공급 수준은 사는 곳, 계층에 따라 큰 격차로 인해 공간적 배제 문제가 발생

- 따라서 국민 대부분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등 생활 전반에 대한 풍요로운 일상 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생활기본권으로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공간과 서비스**를 “공간복지”로서 법적인 보장 필요
- 한편, 공간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는 개별 시설사업은 근거 법률, 계획, 예산과 소관 부처 등이 달라 유사 시설 및 기능의 중복성, 공급입지 및 시설 규모 등의 적정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
- 공간복지 정책 방향의 일관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며 각 예산의 중복 혹은 과다 투입을 막고 **국민 눈높이와 지역 특성에 맞는 공간복지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 면밀한 현황 분석과 합리적인 과부족 판단기준에 근거한 공간복지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지역주도의 공간복지시설 및 서비스를 계획적으로 공급 및 관리할 새로운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제정 방향

- (기본법 체계로 구성) 공간과 복지 분야에 대한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체계를 정하는 법률로서 공간복지법에 관한 법률은 기본법 체계로 추진
 - 기본법은 당해 정책의 이념이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고 그에 의거하여 시책을 추진하거나 제도의 정비를 도모하고, 해당 분야에서 제도·정책의 전체상을 제시하고 종합화·체계화하며, 장기적 관점을 제시할 때 입법 추진²³⁾
 -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행복 실현을 위해 “공간복지” 정책의 추진 지향점이나 방향성, 열개를 정하고, 기존 개별법에 근거하여 공간계획의 부분계획으로 추진하던 시설 및 서비스 계획 및 사업과 연계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공간복지 실현 체계를 구체화함
 - 기본법에 규정되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기본용어의 정의, 정책추진의 원칙 또는 방향, 추진체계, 재원의 조달방법 등(황승흠, 2010:246)으로, 본 법 역시 기본이념, 실태조

23) 국가 차원에서 그 분야의 정책이 중요하고 중점을 두어 추진한다는 인식을 제시하고 그 책무나 결의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제시된 방향성과 지침에 따라 계획적·종합적·장기적으로 정책을 추진 (박영도, 2008:129~132)

와 기본계획, 각종 지원 시책 등으로 구성

- (기존 계획체계와의 조화)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당해 지역내 공간 및 복지계획내 공간복지 관련 계획이 본 법에 의한 공간복지 서비스계획으로 통합 수립, 관리,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화
 - 각 지역에서 공간복지 시설 및 서비스에 관련한 계획은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계획을 통해 도시의 전체 혹은 일부지역에 대해 수립하고 있어 해당 법률 및 계획의 대상과 목적에 따라 같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별도로 계획되어, 주민이 체감하는 정책 효율성 및 복지 체감도가 낮아지는 현실
 - 상위 도시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서 공간복지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의 원칙을, 도시관리계획에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통해 공간복지시설의 계획방향을 추진하므로,
 - 본 법에서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지역내 ① 서비스 및 시설 현황, 접근성, ② 운영실태, ③ 이용자 만족도, ④ 주민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와 시설의 재배치·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련 계획에 재반영하는 환류시스템으로 운영
- (지역 주도, 중앙지원의 시설계획 및 공급·관리) 중앙은 원칙과 정책의 기본 방향, 국가최소수준을 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지역에서는 필요한 공간복지의 수준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의 계획 수립, 공급 실현 및 관리 운영 주도

■ 제정 의의 및 기대효과

- 공간복지 개념과 국가최소수준 설정으로 서비스 수준 제고
 - 공공건축, 생활SOC 등 시설을 단순한 정책과 사업의 수단이 아닌, 복지서비스를 위한 자원인 “공간복지”로 개념과 기능 확장
 - 국가최소수준의 설정으로 공간복지 서비스의 가치와 수준 제고

- 중복되거나 과잉/유휴된 시설 기능 및 사업의 재편
 -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시설 및 서비스 기능의 재편, 유휴시설의 재활용 등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사업을 재편함으로써 시설 기능의 중복성, 예산투입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 해소
- 국가 및 지자체 정책 방향의 정합성 확보
 - 중앙 정부의 기본계획, 광역지자체의 시행계획, 기초지자체의 서비스 계획으로 계획 간 연계를 강화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 상향식 공간복지 서비스 계획 활성화
 -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상세 실태조사와 심층 분석을 통해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특성 반영 가능
- 변화에 대응가능한 시설 관리 가능
 - 도시기본계획의 공공시설계획, 도시관리계획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일부 시설에 국한되는 경직된 시설계획에서 탈피
 - 지속적 실태조사와 평가 등으로 계획을 재검토 하여 지역의 여건에 따라 지속가능한 공급 및 관리가 가능한 계획의 융통성 확보
- 실증 자료와 분석에 기반한 합리적 계획 추진
 - 공간복지정보시스템의 구축으로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집·관리 및 활용하고, 과학적 분석이 가능
 - 이러한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방향 설정, 입지 분석 등을 통해 합리적인 전략 도출 가능

2. 주요 내용

■ 공간복지 관련 개념의 정립 (제3조)

- (공간복지)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세대와 계층에게 필요한 공간과 서비스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것
- (공간복지시설)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과 공간

■ 공간복지계획 체계 마련 (제6조, 제9조~11조)

- 중앙은 기본방향을 제시, 지역은 여건에 맞는 자체 계획 수립
- (공간복지 기본계획) 정부가 국가의 공간복지 추진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공간복지시설 및 서비스의 국가최소수준을 설정하고, 수준 달성을 위한 정책 추진 전략 (수요·공급, 기능의 조정, 사업 추진 등)을 제시
- (시·도 공간복지 시행계획) 시·도가 공간복지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공간복지시설 및 서비스의 공급 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시행할 단계적 추진전략을 담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지역의 공간복지시설 및 서비스 공급 수준과 기준을 설정하고, 공간복지 광역 전달체계 및 공간복지사업의 추진 전략을 제시
- (시·군·구 공간복지 서비스계획) 시·군·구가 지역사회의 수요와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전체 혹은 일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공간복지 서비스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함
 - 지자체 단위 서비스 수준 및 시설 공급·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은 부재하여 시설 입지 타당성, 운영 효율성 등 계획적 관리에 한계

목적	국민의 공간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함 공간복지정책의 수립·조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기본이념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공간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보다 나은 공간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정의	▶공간복지 :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세대와 계층에게 필요한 공간과 서비스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것 ▶공간복지시설 :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과 공간 ▶국가최소수준 :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영위를 위해 국민 대부분이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달성 하는 것이 바람직한 보편적 공간복지의 양적, 질적 수준에 관한 지표			
계획체계	계획	국가 공간복지 기본계획(제6조)	시·도 공간복지 시행계획(제9조)	시·군·구 공간복지 서비스계획(제11조)
		•공간복지정책의 기본방 향 및 추진 목표 설정 •국가최소수준의 설정 •분야별 주요 시책 •공간복지시설의 수요· 공급	•지역 여건을 고려한 공간복 지정책 목표 설정 •지역의 서비스 공급 기준을 설정 •공간복지 광역 전달체계 구 축 •공간복지사업의 추진전략	•시·군·구 공간복지 정책의 비전 및 목표 설정 •지역 현황진단 및 여건전망 •공간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 •기존 공간복지시설의 재배치 및 신규 공급 계획 •자원조달 및 운영효율화
	평가	▶ 국가최소수준 및 지역적정기준 설정(제7조) ▶ 공간복지 실태조사 및 수준평가(제8조) ▶ 공간복지 영향평가(제12조)		
정책 지원	▶ 공간복지정책 연구사업(제13조)		▶ 공간복지정보시스템 구축 (제15조)	
	▶ 공간복지시설의 복합화 (제16조)	▶ 공간복지시설 조성 시범사 업 실시(제17조)	▶ 공간복지 관련 사업의 성과평가 (제18조)	
협력체계	▶공간복지정책지원센터의 지정 (제14조) ▶국가공간복지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조직(제19~20조) ▶관계기관의 협조,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제21~22조) ▶국가공간복지기획단(제23조)			

- 지역내 공간복지시설 전수 현황, 서비스 수요 등 면밀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서비스와 시설의 재배치·공급·관리계획

■ 기준의 설정 및 조사·평가 체계의 마련

- 국가최소수준의 설정 및 달성목표 활용 (제7조)
- (국가최소수준) 국민 대부분이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보편적 공간복지의 양적, 질적 수준의 최저 한계선
 - 국가최소수준을 기준으로 지역의 공간복지 수준을 평가하고 공간복지 대상과 지역을 설정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
 - 국가최소수준을 기준으로 5년 단위의 시설 및 서비스 공급량을 추산하여 예산의 산출, 정책 추진 방향 등을 설정
 - 기준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준 평가 실시
- (지역적정기준) 국가최소수준을 고려하여 지역여건에 따라 공간복지서비스의 적정 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할 서비스 및 시설 공급기준으로 도출하여 현황 진단 및 계획 평가에 반영

참고

- 국가최소수준(National Minimum)은 서비스 최저한계선이며, 지역적정기준(Local Optimum)은 지역내 서비스 공급기준에 해당
- (주거기본법) 최저주거기준, 유도주거기준으로 구분
- (서울시민복지기준2.0)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분야에 대해 최저기준 및 적정기준 지표로 구분 설정
- (일본) 입지적정화계획을 통해 도시기능구역내 거점에 따라 입지 유도 시설 분류
- (영국) 농촌서비스기준을 만들어 시설 외 다양한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을 포함

• 공간복지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진단 (제8조)

- 기본계획 등 공간복지정책의 수립에 기초가 되는 공간복지시설의 시설현황, 운영, 이용, 지역 여건 등의 실태를 조사
- 공간복지 ① 서비스 및 시설 현황, 접근성, ② 운영실태, ③ 이용자 만족도, ④ 주민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간복지 서비스계획 수립·변경 시 공간복지 실태조사를 실시
- 공간복지시설의 전국 현황에 대한 ① 자료 구축, ② 통계 생산, ③ 정보시스템 탑재, ④ 분석자료 활용
- 행정정보망 및 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조사를 원칙으로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이용자 및 수요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

입법례

- (주거실태조사) 주거기본법 제20조에 의거, 일반조사와 정책조사로 구분하여 2년마다 가구 표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거통계 생산
-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지역보건법 제4조에 의거, 매년 실시하는 표본 설문조사로 실시하며 255개 지역사회 건강 통계 생산

• 공간복지영향평가 (제12조)

- 지역의 공간복지 제고를 위해 개발 및 정비사업* 추진시, 향후 공간복지 서비스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 인구 증가를 유발하는 사업 추진시 사업계획에 포함된 공간복지시설 및 서비스의 적정 수준을 검토
- 해당 지역의 공간복지실태, 해당 사업으로 예상되는 공간복지 서비스 수준의 변화, 서비스 수준 제고 필요성 등을 평가

*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 시설사업 등

• 공간복지 관련 사업의 성과평가 (제18조)

- 정책사업을 통해 국비 지원을 받은 복합화사업(제15조), 공간복지시설 조성 시범사업(제17조) 등의 사업시행 후 성과를 평가
- 해당 사업의 목표 달성도, 지역의 공간복지 서비스 접근성 개선 효과, 사회적 편익 등을 측정·평가하여 차기 사업 추진에 반영
- 국무조정실장은 성과평가를 한 경우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입법례

- (성과의 평가) 문화예술진흥법 제35조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년도 3월 말까지 위원회에 통보
- (건축정책 국회보고) 건축기본법 제15조에 의거, 국토부 장관은 건축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주요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보고서를 2년마다 국회 소관상임위에 제출

■ 공간복지 정책의 추진 지원

• 공간복지정책 연구사업 (제13조)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간복지 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한 공간복지 정책 연구를 수행하여 지역에 성과를 공유
- 공간복지에 관한 현황분석, 국가최소수준 설정, 평가지표 마련, 정책 효율화 방안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선진화된 기술 필요
- 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거나 공간복지 정책 연구시설 조성, 연구비 등 지원

• 공간복지정책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4조)

- 공간복지를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간 복지정책지원센터를 지정
- 「정출연법」에 의한 건축공간연구원, 「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등
- 정책 수립·이행 지원, 수요조사 및 공급 상담, 현황 및 수요 자료의 구축·생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위탁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입법례》

-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지역개발사업 구역의 지정,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 등 정책 지원
- (공공건축지원센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국토부 장관은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공공건축의 발주 등 대한 자문,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업무 수행

• 공간복지 정보시스템의 구축 (제15조)

-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료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고, 국민이 관련 정보를 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구축·운영
- 정부, 지자체, 주민 등 각 주체가 공동으로 활용가능한 공간복지 서비스 공급·관리 관련 객관적 정보 및 과학적 분석 플랫폼으로 구축
- (데이터 구축 및 분석) 공간복지 실태조사를 통해 구축된 시설의 물리적 현황, 운영실태, 이용현황, 수요조사 등의 전국단위 디지털 자료를 구축하고 접근성, 밀도, 서비스 소외지역 등 다양한 분석 결과 도출
- (통계 생산 및 공간지리정보 제공) 공간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주제별, 지역별로 생산 공표하고 해당 통계의 분석지도 등을 지리정보 서비스로 제공
- (지역의 시행계획, 서비스계획 수립 지원)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현황을 면밀히 분

석하여 여건에 맞게 계획할 수 있도록 자료와 분석 프로그램 지원

- (공간복지 종합정보 플랫폼) 정책 및 사업 정보 제공, 시설 정보 공유, 지역의 시설 현황 분석, 주민 의견 소통이 가능

《입법례》

-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환경보건법 제28조의2에 의거, 환경부장관은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등과 관련된 환경보건 정책을 지원, 관련 정보를 수집·보급
-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에 의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 지원

• 공간복지시설의 복합화 (제16조)

- 재정부담 경감, 토지이용 효율화, 이용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하여 두 개 이상의 공간복지시설 복합화하여 조성
- 복합화사업 시행시 관계주체들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
- 복합화 사업계획의 수립절차 및 내용, 사업추진 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구체화

※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되고 있는 “생활SOC3개년계획(‘20~’22)” 및 생활SOC 복합화사업의 지원, 사업시행 방식, 사업비 집행 기준 등을 참조, 준용

• 공간복지시설 조성 시범사업 실시 (제17조)

- 공간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공간복지시설 조성 및 이용 효율화를 촉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지정하여 재정 지원
- 공간복지시설 복합화 사업, 지역내 공간복지시설의 기능을 조정하여 재배치·재구축하는 사업, 그린리모델링 등 개보수 사업,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공간복지시설 확충 사업 등을 지정 가능

입법례

- (시범사업의 실시) 도로법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국토부 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대상지를 지정
- (시범사업의 실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대상 사업 및 지역을 지정

■ 정책 지원 및 협력 체계의 구축

- 국가공간복지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조직 (제19~20조)
 - 공간복지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공간복지정책위원회를 설치
 -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실적 점검, 공간복지 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등 심의·조정
 -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 40명 이내의 위원(당연직, 위촉)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
 - 위원회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 설치
- 관계기관의 협조,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제21~22조)
 - 국가공간복지정책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요청·의견청취, 관계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기관·법인·단체 등에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하거나 임기제 공무원 채용

• 국가공간복지기획단 설치 (제23조)

- 국가공간복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공간복지정책위원회 소속으로 국가공간복지기획단을 설치
- 국가공간복지기획단의 단장은 공간복지정책위원회의 간사로 역할

입법례

- (환경정책위원회)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의거, 환경부 장관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는 중앙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음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기본법 제13조에 의거,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의 건축정책의 조정 등을 위해서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둠
- (기획단) 건축기본법 제17조에 의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기획단을 둠

• 국회 보고 (제25조)

- 정부는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확정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
- 2년마다 주요 공간복지정책의 수립·추진실적 및 공간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

입법례

- (건축정책 국회보고) 건축기본법 제15조에 의거, 국토부 장관은 건축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주요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보고서를 2년마다 국회 소관상임위에 제출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보고 등)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에 의거 정부는 기본계획을 세운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
- (국회 보고) 청년기본법 제27조에 의거, 정부는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확정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

3. (가칭) 공간복지기본법(안)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공간복지를 제고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공간복지정책의 수립·조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공간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보다 나은 공간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공간복지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장소 및 지역사회 기반의 복지
2. 공간복지를 위한 지역의 공간환경 진단 및 혁신
3. 공간복지 서비스 및 시설의 공급
4. 사회적 참여와 연대를 통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복지"란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세대와 계층에게 필요한 공간과 서비스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간복지시설"란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과 공간으로서 세부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가최소수준"이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영위를 위해 국민 대부분이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달성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공간복지의 양적, 질적 수준에 관한

지표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기관 및 그 소속기관

나.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기관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간복지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간복지정책 수립 절차에 다양한 주체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간복지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공간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간복지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2장 공간복지 기본계획 등

- 제6조(공간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공간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간복지정책의 기본방향
2. 공간복지정책의 추진목표
3. 공간복지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4. 공간복지시설의 현황 및 전망
5. 공간복지시설의 국가최소수준 설정에 관한 사항
6. 공간복지시설의 수요·공급 및 기능 조정 방향
7. 공간복지 전략 및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8. 공간복지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9. 그 밖에 공간복지정책과 관련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제18조에 따른 국가공간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국가최소수준의 설정) ① 국무총리는 이용가능한 시설과 서비스의 질, 시설까지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공간복지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각 공간복지 서비스 혹은 시설별 국가최소수준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최소수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공간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국가최소수준을 설정한 경우에는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국가최소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라 국가최소수준의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국가최소수준 보다 강화 혹은 약화된 별도의 지역적정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국가최소수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⑦ 그 밖에 국가최소수준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공간복지 실태조사) ① 국무총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간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간복지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 1. 공간복지 서비스 및 시설의 현황에 관한 사항
 - 2. 공간복지시설의 운영, 이용현황 등에 관한 사항
 - 3. 공간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공간복지 실태 파악을 위한 사항
 - ② 국무총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국무총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간복지실태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복지 관련 정책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내용 및 방법, 주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공간복지 시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의 공간복지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5년 단위의 공간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국가공간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할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리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제출, 추진실적의 제출 및 분석·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국무총리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공간복지 서비스계획) ① 시·군·구청장은 해당 시·군·구의 특성 있는 공간복지 서비스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을 단위로 하는 시·군·구 공간복지 서비스계획(이하 "공간복지 서비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간복지 서비스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군·구청장은 10년 단위의 공간복지 서비스계획을 수립 후 5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④ 시·군·구청장은 공간복지 서비스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복지 서비스계획 수립·변경 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였거나 변경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실태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공간복지 서비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간복지 목표에 관한 사항
2. 직전 계획의 추진실적 및 성과 등에 관한 사항
3. 인구구조, 경제상황, 주거실태 등 지역 현황과 지역 여건 변화 전망
4. 공간복지시설의 물리적 상태, 이용실태, 접근성 등 서비스 수준 분석
5. 공간복지 서비스의 유지 관리, 운영실태 분석
6. 지역 공간복지 서비스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공간복지시설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관한 사항
8. 공간복지시설의 재배치 및 신규 공급에 관한 사항
9. 재원조달 및 운영·관리 효율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군·구의 공간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시·군·구 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공간복지 영향평가) ① 지역의 공간복지 제고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향후 지역의 공간복지 서비스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이하 '공간복지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4. 그 밖에 공간복지환경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공간복지 영향평가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대상 지역의 공간복지실태
2. 해당 사업으로 예상되는 공간복지 서비스수준 변화
3. 공간복지 서비스수준 향상 방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의 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인가·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 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 등의 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이하 "승인 관청"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공간복지 영향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승인관청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공간복지 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변경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1항 각 호 외 공간복지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나 규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공간복지정책 지원 사업 등

- 제13조(공간복지정책 연구사업) ① 국무총리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간복지 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이하 "공간복지 정책연구"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탁하거나 공간복지 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공간복지정책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국무총리는 공간복지를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공간복지정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건축공간연구원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른 공간복지정책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간복지정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간복지 관련 정책 수립·이행 지원

2. 공간복지시설 수요조사 및 공급 관련 상담 지원

3. 공간복지시설 관련 현황 및 수요 자료의 구축 및 생산

4.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이 법에 따라 국무총리로부터 대행 또는 위탁받은 업무
 5. 그 밖에 체계적인 공간복지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④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간복지정책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공간복지정책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공간복지 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국무총리는 공간복지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료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고, 국민이 공간복지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복지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국무총리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제14조에 의한 공간복지정책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정보시스템은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국유재산법」 제66조에 따른 국유재산 대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장과 연계하여야 한다.
 - ⑤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공간복지시설의 복합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부담 경감, 토지이용 효율화, 이용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하여 공간복지시설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복합화하여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두 개 이상의 공간복지시설을 복합화하여 조성하는 사업(이하 “복합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주체들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공공기관과 복합화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 기관 등과 협의하여 복합화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사업 계획 수립절차 및 내용, 그 밖에 사업절차, 사업추진방식, 재정부담 등 복합화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공간복지시설 조성 시범사업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간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공간복지시설 조성 및 이용 효율화를 촉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간복지시설을 복합화하여 조성하는 사업
 2. 지역내 공간복지시설의 기능을 조정하여 재배치, 재구축하는 사업
 3. 공간복지시설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등 개보수 사업
 4.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건설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공간복지시설 확충 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등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간복지시설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기준의 적용, 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18조(공간복지 관련사업의 성과평가) ① 국무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공간복지 수준 제고 등의 성과를 측정·평가하여야 한다.

1. 제15조에 의한 복합화사업

2. 제17조 1항에 의한 공간복지시설 조성 시범사업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장 국가공간복지정책위원회 등

- 제19조(국가공간복지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공간복지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공간복지정책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공간복지 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공간복지 정책의 분석·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공간복지 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공간복지 정책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간복지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 제20조(국가공간복지정책위원회 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가 추천한 자

2. 공간복지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의 위원 중 기관·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21조에 따른 국가공간복지기획단의 단장이 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무국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국가 공간복지를 위한 중요 정책에 관한 의견을 국가공간복지정책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시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22조(임직원의 파견요청 등)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기관·법인·단체 등에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 제23조(국가공간복지기획단)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국가공간복지기획단을 둔다.
 ② 국가공간복지기획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장 보칙

-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국무총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그 업무의 일부를 공간복지정책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5조(국회 보고) ① 정부는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확정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2년마다 주요 공간복지정책의 수립·추진실적 및 공간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8조에 따른 국가공간복지정책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2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간복지 관련 전문기관·단체의 임직원

■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문헌

- 강현수. (2013). 분권과 주민참여를 통한 상향식 지역계획 사례 연구 인도 케랄라 주 주민 계획의 특징과 시사점. 공간과 사회, 43, 104-139.
- 관계부처 합동. (2018).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15).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복지 실현 및 공공건축 조성 정책방안 연구.
-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2019). 생활SOC 대국민 공청회 자료집. (4월 1일)
-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2019). 생활SOC정책컨퍼런스자료집. (12월 17일)
- 국토교통부. (2016).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 국토교통부. (2016). 2016년도 주거실태조사-통계보고서-.
- 국토교통부. (2014).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 국토교통부. (2014).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 국토교통부. (2010). 2010년도 주거실태조사-통계보고서-.
- 국토교통성 (2020). 입지적정화계획작성입문 (https://www.mlit.go.jp/toshi/city_plan/content/001379331.pdf, 접속일: 20.12.11.)
- 국토교통성. (2018). 입지적정화계획 작성 입문.
- 국토지리정보원 (2019).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http://nationalatlas.ngii.go.kr/pages/page_1857.php, 검색일: 20.12.15)
- 김세용. (2019). 생활 SOC 확충, 공간복지로 가는 지름길. 국토, 2-4.
- 김영화. (2010).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성찰과 전망.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3(1), 91-121.
- 김혜승, 박미선, 천현숙, 차미숙, 김태환. (2012).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거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김혜정. (2020). 공간복지x공간닥터. 건축, 64(4), 26-29.
- 남지현, 조희은. (2019). 일상에서 누리는 최소한의 복지, 생활SOC. 이슈&진단, 1-27.

- 류영국. (2020). 학교와 생활SOC. 교육시설, 27(3), 11-14.
- 맹다미, 이주일, 백세나. (2018).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주요 쟁점과 과제. 서울연구원.
- 박근석, 주관수. (2016). 주거복지 전달체계에서 커뮤니티의 역할에 대한 탐색적 연구. 7(2), 103-111.
- 박세경. (2014).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의 지역간 격차와 접근성 이슈에 관한 탐색적 접근. 보건복지포럼 No.2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세경, 이정은, 신수민, 양난주. (2013).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의 지역단위 분석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영도. (2008). 입법학입문. 한국법제연구원.
- 보건복지부. (2020). “사회서비스 이용으로 국민 삶의 질 개선-보건복지부. 2019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결과 발표-”. 6월 4일자 보도자료.
- 서울주택공사. (2019). 주거복지를 넘어 공간복지로.
- 성은영, 강현미, 고영호, 송경민. (2019).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자립적 기초생활 인프라 공급 및 관리 지원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 성은영, 윤주선, 김용국. (2018). 지방중소도시의 스마트축소 도시재생 모델 개발 연구. 건축공간연구소.
- 성은영. (2018).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마련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 자료집
- 성은영, 임유경, 심경미, 윤주선. (2015). 지역특성을 고려한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 전략 연구. 건축공간연구소.
- 성은영, 임유경, 임현성. (2013). 노후 주거지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현황 및 수준 분석.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스시이정. (2018). 스시이정 입지적정화계획.
<http://www.town.shisui.chiba.jp/docs/2018030100018/files/keikaku-gaiyo-color.pdf> (검색일: 20.12.20.)
- 유근춘, 서문희, 임완섭. (2011).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윤영진, 양기용, 이인재, 이재원 (2011). 사회서비스 정책론. 나눔의 집.

- 이영범. (2020). 삶을 보듬는 공간과 일상생활의 통합복지. 건축, 64(4), 30-33
- 이봉주. (2019). 포용적 복지의 중간성적표. 복지칼럼(2019.5.17.)
<https://www.bokjiro.go.kr/nwel/welfareinfo/livwelnews/news/retireveExpertDetail.do?srchListType=305&searchWrd=&srchKeyCode=&pageUnit=10&pageIndex=1&dataSid=6660880#none> (검색일: 2020.12.15.)
- 이재수, 양재섭. (2012). 서울시 1·2인 가구 유형별 특성에 따른 주택정책 방향. 서울연구원.
- 이주일, 김인희. (2010). 「국토 및 도시계획체계의 재정립을 위한 국제비교 연구」, 서울시 정개발연구원.
- 이중호. (2015).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법체계의 개선방안. 동아법학, (68), 435-476.
- 임명진, 박수진, 김진호. (2020). Residential Complex Design Scheme for Spatial Welfare by Inducing Urban Vulnerable Class Interaction.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15(2), 27-40.
- 정해식, 권지성, 정선욱, 김성아, 전영섭, 권석만, 김석호, 신혜란, 이봉주, 채수홍, 홍석철, 구서정, 진예린, 유지수 (2019).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 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청소년 복지지원법. 법률 제15988호.
- 최명민, 박향경, 이현주 (2017). Lefebvre의 공간이론에 근거한 공간기반 사회복지실천의 가능성 탐색. 한국사회 복지학, 69(4), 99-125.
- 최정민, 박동찬 (2020). 주거환경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및 중요도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 18(1), 1-20.
- 통계청. (2016). “2014년 생활시간조사 행동분류표”
- 통계청. (2019). “장래인구추계(2017~2067년)”. 3월 27일 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2021). ‘사상 첫 인구감소, 세대수는 사상 최대’. 1월 4일 보도자료.
- 황승흠. (2010). 기본법체제에 대한 법학적 이해. 공법학연구, 11(1), 243-270.
- 국토교통성. (2015), 改正都市再生特別措置法等について.
- City of Peoria. (2014). City of Peoria, Arizona, Community Services Master

- Plan.
- City of Swan. (2017). Standards of Provision – Open Space and Community Buildings.
- City of Toronto. (2017). City of Toronto Parks and Recreation Facilities Master Plan 2019-2038.
- Harvey, David. (1973). Social Justice and the City, Oxford: Basil Blackwell.
- Helliwell, J., Layard, R., & Sachs, J. (2019). World Happiness Report 2019, New York: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 Lefebvre H.. (1968). 「The right to the city」. Oxford: Blackwell.
- NYC. (2014). Community Facilities and Services
- Rothstein, Bo. (1998). Just Institutions Matter: The Moral and Political Logic of the Universal Welfare Stat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ylor-Gooby, Peter. (2004). New Risks, New Welfare: The Transformation of the European Welfare State.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UN. (1948).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https://www.ohchr.org/EN/UDHR/Pages/Language.aspx?LangID=kkn>. (검색일: 2020.12.15.)
- WHO. (1961).

- 건강가정기본법. 법률 제17280호(2020. 5. 19., 일부개정)
- 건강검진기본법. 법률 제17472호(2020. 8. 11., 타법개정)
- 건축기본법. 법률 제17453호(2020. 6. 9., 타법개정)
- 건축물관리법. 법률 제17171호(2020. 3. 31., 타법개정)
- 건축법. 법률 제17171호(2020. 3. 31., 타법개정)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법률 제17344호(2020. 6. 9., 타법개정)
- 경찰공무원보건의안전및복지기본법. 법률 제17687호(2020. 12. 22., 타법개정)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제17453호(2020. 6. 9., 타법개정)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법률 제14425호(2016. 12. 20., 일부개정)
- 국토기본법. 법률 제17063호(2020. 2. 18., 타법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02호(2020. 1. 29., 타법개정)

군인복지기본법. 법률 제16033호(2018. 12. 24., 일부개정)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제17764호(2020. 12. 29., 타법개정)

노인복지법. 법률 제17199호(2020. 4. 7., 일부개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618호(2020. 12. 8., 타법개정)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10호(1987. 10. 29., 전부개정)

도로법. 법률 제16954호(2020. 2. 4., 타법개정)

도시개발법. 법률 제16568호(2019. 8. 27., 타법개정)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1132호(2018. 12. 21., 일부개정)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1133호(2018. 12. 21., 일부개정)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1291호(2020. 4. 20., 일부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7171호(2020. 3. 31., 타법개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171호(2020. 3. 31., 타법개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012호(2020. 9. 10., 타법개정)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제17710호(2020. 12. 22., 일부개정)

보건의료기본법. 법률 제17472호(2020. 8. 11., 타법개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7171호(2020. 3. 31., 타법개정)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제17202호(2020. 4. 7., 일부개정)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7782호(2020. 12. 29., 일부개정)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제727호(2018. 11. 16., 제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법률 제16768호(2019. 12. 10., 타법개정)

아동복지법. 법률 제17784호(2020. 12. 29., 일부개정)

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제17284호(2020. 5. 19., 일부개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법률 제12449호(2014. 3. 18., 일부개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법률 제14332호(2016. 12. 2.,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6733호(2019. 12. 3., 일부개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법률 제14974호(2017. 10. 31., 일부개정)
 주거기본법. 법률 제16391호(2019. 4. 23., 일부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1389호(2021. 1. 12., 일부개정)
 주택법. 법률 제17486호(2020. 8. 18., 일부개정)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제17237호(2020. 4. 7., 일부개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238호(2020. 4. 7., 일부개정)
 지역보건법. 법률 제16731호(2019. 12. 3., 일부개정)
 청년기본법. 법률 제16956호(2020. 2. 4., 제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221호(2020. 12. 8., 타법개정)
 환경보건법. 법률 제17326호(2020. 5. 26., 타법개정)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제16619호(2019. 11. 26., 일부개정)

송민섭·김유나. (2020). “매년 10억씩 혈세 ‘꿀꺽’하는 공공시설·793개 중 ‘찜’이 없다”. 세계일보 8월 20일 기사.
<https://www.segye.com/newsView/20200729520685?OutUrl=naver>. (검색일: 2020.12.15.)
 오해원. (2019). “문체부, 전국 112개 초등학교에 VR 체육시설 보급”. 노컷뉴스. 3월 20일
 자 기사. <https://www.nocutnews.co.kr/news/5121496>. (검색일: 2020.12.5.)
 전북일보. (2020). “가동없는 ‘아이돌’... 국내 최초 학교 실내체육관 준공”, 전북일보 12월 20일자 기사.
<http://www.ji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98510> (검색일: 2020.12.25.)
 주수원. (2021). “협동조합의 ‘큰 손’ 농협, 농촌 돌봄서비스의 ‘큰 손’으로 나서길”. 한겨레. 1월 5일자 기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77326.html#csidx7a6dd8d5146980794bcc4c2e1dc682d (검색일: 2021.1.5.)
 최재규. (2019). “안구소멸 위험도 따른 지역별 ‘맞춤 복지체계로 전환해야’”. 문화일보. 6월 18일자 기사.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61801032103311001> (검색일: 2020.12.5.)
 홍재희. (2019). “너도나도 생활SOC 사업 유치에 나선 지자체·면밀한 사업성 검토부터... 정부 생활SOC 예산
 욕심에 유치 나섰다가 의회 등에 제동”. 대한지방자치뉴스. 3월 29일 기사.
http://www.klan.kr/news_gisa/gisa_view.html?gisa_category=05090000&gisa_idx=45874

(검색일: 2020.12.5.)

고려대한국어대사전 (출처 : <https://ko.dict.naver.com/>, 2020.12.8. 검색)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http://eduinfo.go.kr/portal/theme/abolSchStatusPage.do>,
2020.12.15. 검색)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국토교통부 정책정보, 도시계획시설 (https://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id=63,
검색일: 2020.12.15)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출처: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2020.12.8. 검색)

현안연구보고서 2020-1

공간복지기본법 제정 방향 연구

A Study on Enactment Plan of Framework Act on Space Welfare

지은이 오성훈, 유광흠, 성은영, 강현미, 한수경

펴낸곳 건축공간연구원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전화 044-417-9600

팩스 044-417-9608

<http://www.auri.re.kr>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건축공간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